

第287回國會  
(臨時會)

#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8 號

國會事務處

2010年2月10日(水) 午前 10時

## 議事日程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附議된案件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1

(10시36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나라당 의총으로, 이번에는 민주당 의총으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총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더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만약에 늦으면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방청객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38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소남 의원의 소개로 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 회원 12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소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남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 국회에 들어온 이후 그동안 입법활동과 정책토론회 등 정성 어린 의정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돌이켜 보면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여 주었으며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과 국민적 자부심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앞장서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아침부터 수고하시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에 건국된 14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배양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성장 잠재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장 잠재력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세계이기 때문에 물적 자본은 사실은 외국에서 도입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만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후손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약속한 규칙, 법치 질서 확립 또는 다양성 인정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자본을 잘 만들어 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남 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초 법질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국가 가운데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27위로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리님께서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경제적으로는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정치적으로는 빠른 민주화 과정에서 법이 일관되게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남 의원** 예.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습니다.

법의 수준은 그 나라의 신용도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치 수준이 향상되어야 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법치 수준은 국격을 좌우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자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법치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국격의 제고를 위해서도 법치 수준의 향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남 의원** 예, 그렇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갑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고성불패(高聲不敗)’라는 말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들어봤습니다.

○**김소남 의원**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억지 쓰고 떼쓰면 받아 주고,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고 머리부터 두르고 나서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성불패’ 같은 냉소적인 말과 관련하여 법질서를 책임지는 정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경제 발전과 선진국 도약의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라고 하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소남 의원** 장관께서는 불법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1회 평균 집회하는 데 한 90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소남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약 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정도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이었다면 연평균 약 1%가량의 경제 성장이 보태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법질서 확립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질서와 시민의식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끌어올리는 준법정신을 바로 세워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법무부장관 이귀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준법정신과 시민의식 함양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준법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의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7년 4건에서 2008년 18건, 2009년 27건으로 최근 3년간 7배로 증가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공무원의 범죄가 매년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우선 공직사회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부패가 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보면, 금품수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금품수수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토착비리로 구별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엄중 관리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품위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비리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규정이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남 의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무원 징계사유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이 49%로 가장 높았고 직무유기 및 복무위반이 26%, 증·수뢰가 4.2%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품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일선 공직자들의 토착적인 비리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엄하게 하고 감사 직위를 외부 인사가 와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직 감찰과 토착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좀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강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통과되면 시행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횡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을 병과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간에는 순환교류를 상당히 넓은 범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비리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해서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남 의원** 공무원의 부패 만연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 풍조를 가중시키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투명한 법치사회 구현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는 토착비리 근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 윤리교육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교육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에 봉사한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력과 경력을 살피는 부분에 중점을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의식도 강의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윤리관을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남 의원** 지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지표 순위를 보면 OECD 30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통합 부문은 1990년 24위에서 2007년 26위로

떨어져 18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서는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지표를 보면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회통합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선 남북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념 및 세력 간의 다툼에서 통합이 제외되는 부분이 크고 두 번째는 노사관계나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안전부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라는 정책을 만들에 있어서 이 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과정 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나 집행을 할 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는 정책 개발과 집행 과정의 방법론을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소남 의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사회통합이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성장과 사회통합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그래서 이걸 어느 한 부처라기보다는 범정부적인 나아가서는 정치와 사회, 경제 전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안에 이념이라든지 지역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계층 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폭넓은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 위원회의 활동 나아가서 정부가 가슴을 열고 모든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소통과 대화를 증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남 의원** 국가상징 선양사업은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상징 선양사업 예산을 보면 2007년 3억 5000만 원에서 2010년 3억 원으로 매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민족문화상징사업은 2007년 50억 원이 집행된, 사업집행이 전무합니다. 국가상징 선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먼저 존경하는 김소남 의원님께서 국가 상징과 선양사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상징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3억으로 이렇게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선양사업은 국내에서는 시대상에 맞는 애국이라든지 국민의 그리고 사회 성원의 정체성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디자인이라든지 상징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가의 상징을 종합적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끔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국내적으로 이 국가 상징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무궁화동산을 마련한다든지 또 다양한 국가 상징을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독지가께서 우리나라도 보이는 곳에 큰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거리의 정온감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남 의원**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의 용역 결과를 통해 국가 상징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선양 및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던 이유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률안을 제안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자문하는 외국인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국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

개꿈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부분 나라가 이게 이제 완전히 법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례로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률안이 상당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행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남 의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예.

○**김소남 의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저는 세계 선진 국가들처럼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의 구심체인 국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준수와 국가상징 선양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보훈·교육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상징 선양 등을 통해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국민통합을 확보하여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선결조건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길이 곧 대한민국을 키워가는 힘이고 역사 발전의 동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소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양 만안 출신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으로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엄기영 MBC 사장마저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양대 지상파를 장악한 것입니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공영방송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낙하산,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뉴스통신 이사장, 온갖 방송 곳곳에 장악은, 독화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KBS 정연주 사장을 그리고 MBC PD수첩 사건을, YTN 노조사건을 모두 무죄 판결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인 언론 탄압이 총체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십시오.

긴장되십니까? 물 드시고……

시중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동안 언론계에 수십 년 종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이종걸 의원** 군사정권에서도 보통 사장을 통해서 인사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 갈아 치우면서 이렇게 인사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글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사장에게, 노골적으로 사장을 제쳐 놓고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MBC 사장을 아주 핫바지를 만들어 버리고 사장에게 참담한 인격 파괴, 수모를 줘서 아주 저열한 방법으로 사퇴시킨 사실상 해고,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과정은 익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방송장악위원장께서 지난 12월 MBC가 이미 이사 4명을 불신임하고 이사 2명만 남겨 놓은 채 MBC 사장과 이사 2명, 3명이 조그만 이사회를 하면서 MBC를 끌고 나간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우선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저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질문할 때 제가 방송장악위원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기에 들어본 적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호칭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BC 이사회에서 그러한 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가부, 선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방문진 구성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인사권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우리……

○**이종걸 의원** 9명을 전원 임명 제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사실상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을 뺀 5명을 정부 여권에서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들을 인선을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군사정권에서도 이런 사실이 없었던 MBC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 임명 제청해 났으니까 그 사람들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으로 쳐다만 본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지난 정권에서 방문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진이 구성된 이후 소위 MBC를 관장하는 이사회로서의 기능에 만족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하지 못했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난 12월 달에 엄기영 사장을 사실상 유임시키면서 사장을 이렇게 완전 망신을 줘서 사실상 해고시키는 이 생각은 정말 정부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정부가 인사를 하면서 그 당사자가 망신스럽게 퇴장하기를 예상하고 그런 인사를 하는 기관은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방문진을 구성할 때도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을 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인식을 함께하리

라고 믿습니다.

○**이종걸 의원** 최시중 위원장은 곳곳의 여권과 핵심 의견을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MBC PD수첩이 무죄 판결 났어요. 판결 이후에 MBC에 조그만, 크지 않은 기사가 났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도저히 엄기영 사장을 존치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방선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고하자'라는 뜻을 전달해 왔고 우리 '방송장악위원장'께서 '오케이, 결행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분명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송장악위원장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되어서 방문진 이사들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MBC 사장의 거취 문제가 연결된 것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바도 없고 따라서 그런 의사를 방문진에 전달한 바도 없습니다. 또 전달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퇴했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모 인사를 통해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엄기영 체제로는 안 되겠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청와대하고 전혀 교감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방문진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께서 그 뜻에 대한 표현과 의견 없이 이렇게 이사장이 독단으로 부담 있는, 정말 군사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공영방송 사장의 해고를 이렇게 결행할 수 있었을까 이사장이, 교수 출신이라는 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이동관 수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방문진의 이사들이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고, 이번에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는 아마 엄 사장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진행된 사항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방송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2년 하시면서 방송 장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KBS 정연주 사장 강

제 해고하고 수많은 공영방송 사장 강제 해임하고 낙하산 선임 반복하고 그것을 다 우리 최시중, 시중에서는 최시중 방송장악위원장이 다 지휘, 배후 조정했다라는 그런 거의 분명한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든 바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종걸 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라 여기에서 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워요.

MBC 사장이 사실상 해고당하는 이때에 MBC 뉴스에 짝막한 단신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아, 이제 MBC도 장악됐구나,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에 모두 같은 느낌입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최시중 방송장악위원장 뒤에 계신, MB가 승리했다라고 지금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군사정권이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참히 무너진, 서술이 퍼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 갈 줄 알았던 군사정권이 이렇게 무너진 과거 역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고 우리 정권이 그렇게 무참하게 사라질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장악할 의사가 없고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습니다.

언론을 언론 자유를 진작시키고 방송의 역할이 더욱 국민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송문화 진작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 방송장악위원장께서 이제 다른 언론까지 끌어들이어서……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윤성** 이종걸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두 번의 비유는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직책이 있고 호칭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칭은 ‘장악위원장’은 좀 삼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종걸 의원** 지난해 7월 22일 날치기해서 방송법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일곱 달 지났지요? 그렇게 급해서 반드시 처리하고 글로벌 방송시장을 위해서, 새로운 방송 재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날치기라도 했던 이 방송법, 지금 일곱 달 지났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 그게 아마 7월 31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 후에 헌재에 제소되어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 10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2월에 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래야 서두를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는 것은 존경하는 이 의원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걸 의원** 헌재에 가처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헌재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재판 계류 중이라고 그래서 추진했던 것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 무슨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일곱 달 동안 조중동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선거 때 ‘조중동 너희들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뭐 그렇게 급한 날치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의원님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에서 계류되었다가 끝이 나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 이달 초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종편을 하려면 전년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주주총회가 끝이 나와야 됩니다.

**○이종걸 의원**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또는 언론사의 주주총회까지 걱정할 겨를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께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걸 의원** 일곱 달, 지금 조중동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 영역으로 끌어들이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장악위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언론까지 끌어들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를 총력으로 한번 다해 보겠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해서 그런 ‘길들이기’라는 표현 자체가 그 언론들에 대한 점잖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신문시장의 특성, 아무리 조중동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비판을 토대로 언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을 보십시오. 최근의 조중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입장들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혹은 짧은 기간 동안 길들이기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아마 비참한 말로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 언론을……

○**이종걸 의원** 됐습니다. 묻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언론을 길들이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위원장께서는 일전에 KBS 수신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랬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 달에 2500원 하는 것을 30년 전의 값이 그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5000원~6000원 사이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걸 의원** 다른 사람 얘기를 인용한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한이 그렇게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보도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것은 KBS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KBS2를 광고시장으로부터 퇴출시켜서 지금 종편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눈 껌껌껌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KBS2에서 광고를 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세계적인 방송으로서 KBS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닥입니다.

○**이종걸 의원** 신문에 나온 얘기들을 제가 논평하는 겁니다. KBS 절반을 광고 못 하게 하고 그것을 종편에 주면 KBS도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5000, 6000원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어려운 경제에 수신료 2배 이상 올린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돌린 듯한데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하는 신문 이용하는 이 방법 별로 적절치 않고 미숙해요. 방송장악위원장께서 그 점에 관해서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제가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최근에 Wi-Fi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게 뭐니까? Wi-Fi가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웃음)

○**이종걸 의원** 제가 상임위에서 그랬지요? 통신 문제에 관해서 조금 신경 쓰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장이면 통신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십니까라고 얘기한 적 여러 번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니,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Wi-Fi는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WiBro, Wi-Fi, 뭐 MVNO 같은 것을 지금, 여기가 그 용어 가지고 논의할 자리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종걸 의원** 이게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이종걸 의원**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통신사들이 AP를 개방 안 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AP를 왜 개방 안 합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통신사들은 왜 안 해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관심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뭘…… 제가 지금 통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방송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관계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아이폰 열풍이 젊은이들한테 불고 있어요. 그래서 무선인터넷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AP가 개방이 안 되면서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왜곡된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IP 개방 문제를……

○**이종걸 의원** IP가 아니고 AP입니다, AP.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폰을 얘기한 겁니다. 아이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종걸 의원** 아이폰을 IP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웃음)

말꼬투리 잡지 마십시오!

아이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민했고 작년 연말에 그것을 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지금 아이폰의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종걸 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음성통신 요금이 무지 무지 높지요? 너무 높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이종걸 의원** 통신요금에 대해서 좀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것을 왜 물어십니까?

○**이종걸 의원** 아니,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책에 관련된 문제, 젊은 사람들이, 무선통신 쓰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활의 몇 %, 지금 통신비가 자기 생활비의 근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제가 통신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낮고 높은 것도 모른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묻는 겁니까, 안 그러면 될……

(「의장님, 답변이나 하라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종걸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질문의 취지를 물어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니, 지금 저 보고……

○**이종걸 의원** 됐어요. 다음 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요금 높지요? 그런데 AP가

개방 안 되어서 무선인터넷에 끼워서 할 수 있는 음성통신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그것만 되면 통신요금을 모바일 VIP라고 해서 대폭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 생각한 적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통신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총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무슨 통신 얘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IT 코리아'라 그래 가지고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본 적 있어요?

영국에서 EIU라는 데서 발표했는데 지금 2007년 3위, 2009년 16위로 대폭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관심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통신 업계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통신위원장께서 좀 잘 하시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추락 상태입니다. 이런 데 관심 좀 가지세요, 이런 데. 이런 데 관심 가지셔야지 방송 장악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이 의원님……

○**이종걸 의원** 도대체 업무가 두절되고 단절되고 제대로 이 나라 정책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이 의원님, 방송통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주관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발표한 통신 지수 그것만 갖고 제기를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유엔에서도 우리 정보화 IT 지수가 세계 1위로 결정이 됐고, 세계적 통신기구인 ITU에서도 우리 통신 발달 지수를 2위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정한 언론사나 특정한 기구에서 발표한 지수를 갖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IT 지수를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종걸 의원** 일본은 그런데 1위로 올라갔어요. 모든 지수에 일본이 1위랍니다. 잘 유념하세요.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유인촌 장관님, 잠깐 30초만 물겠습니다.

사법부에 해고 무효확인 승소 판결이 줄을 잇

고 있어요. 그중에 유인촌 문화장관께서 하신 김정현 위원장에 대한 해임 무효도 또 김정현 위원장이 승소했어요.

장관께서 ‘그렇게도 한번 해 보고, 재밌지 않겠어?’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막 아파하고 정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면상에다가 장관님 말씀 이거 뭘니까? 이것은 사법부를 무시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금 이렇게, 해고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 처분이 돼서 내용과는 관계없이 통보를 안 했다는지 아니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로 이게 다시 문제 제기가 된 데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은 사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고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상의 문제가 좀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감정상의 문제와 글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 또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종걸 의원 이 김정현 위원장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모 투자신탁 손절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억 정도 손해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해고시키기 위해서 손절매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 김정현 위원장의 해고 사유 중에 굉장히 무책임하다 또는 무능력하다 또는 부도덕하다 이런 몇 가지의 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뒤치다꺼리로 지금도 월 1억씩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을 금융기관에 물어내고 있고, 연간 300억씩 기금 손실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말기면 안 되는 금융기관에 기금을 맡김으로 해서 사

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는 하지 않았습니지만 아직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고, 해서 이 종걸 의원님께서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사법부 판단에 항의하겠다는 취지인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이미 항고를 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기보다는, 이미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의……

○이종걸 의원 물론 1심 2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재판과정을 좀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 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 정부가 들어서 웬지 모르게 일제를 미화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누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종걸 의원 이 말은 김문수 도지사의 2009년 신년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참 참담하지요? 황당하고?

○국무총리 정운찬 일제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없었다고 하는 발언은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지금 ‘역사박물관’ 해 가지고 ‘건국절’ 하려고 하는데 그 논의가 아직 잠재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아니, 총리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국절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 그 깊은 뜻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극단적인 입장에서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국무총리 정운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의원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

○**이종걸 의원** 그러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물어봐도 되겠지만 총리께서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묻겠습니다.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의장께서 나오시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선 그냥 이 PT만 보여드리고 그 함축적인 의미, 지금 현재 MB 대통령께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그 점에 관해서만 보여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등록금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입장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미입니다.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종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시든 여기 출석하신, 답변하시기로 돼 있는 국무위원 급들은 답변을 하십시오.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걸 여기 나온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분 각자가 또 똑같은 대답과 태도가 연출될까 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법에서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행복해지는 복지기반 구축에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세종시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세종시 문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원래는 우리 농산물 특히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바다를 개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손숙미 의원** 새만금 사업의 주 내용은 처음에는 쌀 생산을 위한 100% 농수산 중심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때는 땅의 이용과 관련해서 농업을 위해서 7 산업을 위해서 3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농업을 위해서는 3만 하고 산업을 위해서 7로 하자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손숙미 의원** 그래서 당초 100% 농지로 개발하려던 계획이 최근에 수차례 수정돼 명품 복합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호남지역의 민심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호남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전북에서는 환영하는 반면 전남에서는 좀 차별받고 있다 해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현재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리 높지 않습니다.

○**손숙미 의원**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50.8%로서 전국 평균인 53.6%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세수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정부청사가 이전을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업을 유치한 충남 아산 탕정과 과천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LCD 단지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인구나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잘 살려면 기업이 와

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손숙미 의원** 아산의 경우에는 LCD 입주 이후 6년간 인구가 4만 8000명이나 증가를 했고 또 파주의 경우에는 03년 24만 4000명에서 7만 5000명이 증가를 했고 재정자립도도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업 등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정부청사 이전에 대한 비효율성과 이전 후의 지역발전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많은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의 사례와 같이 시대 흐름에 따라 사업의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종시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토론 진행이 어렵다면 국민투표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숙미 의원**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집에서 봤습니다.

○**손숙미 의원** 아바타에서 보듯이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의료 분야는 이러한 과학기술과 접목을 해서 시대 변화의 정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민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세미나에 가서 사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손숙미 의원**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료진의 수준은 국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높습니다.

○**손숙미 의원** 예,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전 세계 평균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의료기술력이 정부 규제와 제도적인 뒷받침 미비로 인해서 다른 외국과는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비판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년에 KDI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끝냈습니다만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또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다. 부작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투자 개방형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이 없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손숙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2개뿐입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국민보험이 아니고 전부 다 민영의료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중에서도 대체의료보험까지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만이 투자 개방형 병원을 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투자 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산업적 측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산업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병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병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서는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이용의 시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에 비해서는 자본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만큼 고용증가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정부, 즉 2004년·5년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전 정부에서 논의된 것까지 합치면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이견이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든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문제 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가 등은 정부에서도 이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리께서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손숙미 의원** 그런데 정부가 ‘이 네 가지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을 하면 건강보험이 붕괴가 되고 또 국민의료비가 폭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든지 또 기존 병원이나 의원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이제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까 두 부처에서 공동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입 시기와 도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투자개방형 병원의 필요성이나 생산 유발 효과 같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봐 주십시오.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해외 환자 유치형을 비롯해서 U-헬스나 건강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 연계형은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 적용의 범위도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일본처럼 의료특구와 같은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연착륙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해외 환자 유치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또 산업 연계형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내국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 보고 그 성과를 본 후에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시에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상징적으로라도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를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환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튼튼한 의료 안전망 구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제 큰 병이 났을 때는 기존의 의료급여가 저소득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제가 제 부근의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또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 중이지만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에 비해서 보장성이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 의료비 중 가계 지출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30여 %가 되지 않습니까? OECD가 아마 20% 내외일 것 같은데 가계의 의료부담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손숙미 의원** 그러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로 추락하게 된 사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숙미 의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로 추락한 사람들의 비율……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한국복지패널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18%가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된다면 정부의 의료안전망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못지않게 민간 차원의 추가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 의료구제공동모금회의 설립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의 일정 부분을 의료지원금으로 하고 있지만 11.9%에 불과합니다. 의료구제공동모금회와 같은 전문 모금기관을 설치해서 특화된 전문 모금 활동을 하고 체계적인 배분을 한다면 의료 안전망도 확충되고 전체 모금 규모도 확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질병형 빈곤 추락 예방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의료보장 체계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칠레 바첼렛 대통령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손숙미 의원** 최근에 지지도가 80%가 넘어설 정도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

니다.

○**손숙미 의원** 바첼렛 대통령은 2005년부터 하루 평균 2.5개의 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2006년 1.5명에서 2008년 1.94명으로 올리면서 인기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자 출산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보육시설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는 한 140여만 명이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아동은 110여만 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량으로 봐서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보육시설 근접성이라든지 또 활용 시간대 그 다음에 케어 수준 등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양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질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숙미 의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28일자 서울신문에서는 자녀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46.3%, 남성의 59.5%가 ‘보육기관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이 총량적으로 보면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여전히 부모들은 ‘부족하다’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아 버리고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 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농산어촌 등에 취약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총리께서는 정부가 새싹플랜 또 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하면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숙미 의원** 새싹플랜 또 새로마지플랜에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30%까지 늘린다, 이렇게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5.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시설 이용 아동은 10.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개당 평균 대기자 수가 64.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0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이 27억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383억 원인데 14배나 오히려 급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그 보육시설을 국가가 만들고자 할 때 지자체가 결국은 만들게 되는데 지자체한테 그 부담을 50%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매입비는 역시 또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결국은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자체들이 배정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점점 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2005년에 비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액이 좀 줄어든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동 규정을 개정해서 시설 부지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텐데 그 토지매입비까지 다 지불해 주는 것은 좀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현재 또 직장 보육시설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직장 보육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미 의원 교육 기본권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학교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그런데 무상급식이 정치 이슈로 변질이 되어서 지자체 선거공약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한다고 여러 가지 구호를 내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그런데 학교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양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습득이나 만성질환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급식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은 학교 현장에 배치된 영양 교사만도 4000, 5000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시간이나 학교장 재량 시간 또는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식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그런데 영양 교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 정부도 이미 급식을 교육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손숙미 의원 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등학교에서는 수업료뿐 아니라 급식비까지도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권리라는 생각은 대학에서 20여 년간 식품영양학을 가르친 학자로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확고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총리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의원님과 장기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특히 지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안 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무상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창피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본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현재 급식비나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에 생활보호자는 지자체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등 한 34%가 무료급식 대상자고, 미국은 49.5%가 무료급식 대상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것 정확히 제가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장관은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시는지,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정상 좀 힘들고, 아까 총리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학생들, 환경이 어렵다든지 또는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의 폭을 계속 넓혀 가는 그것은 합당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100% 무상급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서 내세우기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숙미 의원**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서 다르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제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손숙미 의원** 장기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미국이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서도 아직 그 지경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유럽도 영국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영국이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3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 좀 넘지요? 그래서 우리는 2012년까지 이것을 26%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경제 발전 속도와 함께 이것도 높여 가려고 그렇게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감사합니다.

○**손숙미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은 좀 진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지금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설 연휴에 많은 귀성객이 있고 또 개학을 전후해서 다시 증가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예방접종을 확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예,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신종플루에 가장 잘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 8명 중에 1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저는 술이 무슨 감경의 이유가 되는 데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범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중시해서 우선은 절주 캠페인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군부대·보건교사 등으로 해서 하고, 특히 대학은 신입생 환영회 때 음주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절주 동아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주류 판매 금지시설이, 의료기관이나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 시설에는 못하게 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술을 오래 드셔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이른 분들은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코올 상담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의 한계상 장관이 소망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예, 그 파랑새플랜, 표에서 보듯이 파랑새플랜에도 계획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항상 재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라서 주류부담금의 형태로 알코올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재원의 확보 측면이나 알코올이 국민에게 끼치는 해로운 점을 생각을 한다면 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도입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의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숙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감사합니다.

○**손숙미 의원** 다음은 여성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부장관 백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예,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면에 비추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부장관 백희영** 예, 주로 30대 초반부터 OECD와의 격차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이것은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여건으로 인해

서 일·가정의 병행이 어렵고, 따라서 여성들이 30대 초반에 출산을 앞두고 많이 중단을 하고 또한 이것이 여성들의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유연근로제라든지 그런 근로여건을 변화시키는데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동시장에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일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부장관 백희영** 예.

○**손숙미 의원** 국무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면 유니세프에서 북한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보다시피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나 보건의료 혜택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북한에 여러 가지 물자가 많이 갔지만 그 배분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는, 또 하나는 역시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 분야도 취약하고, 따라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현재 분배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손숙미 의원** 앞으로는 남한의 담당자가 북한에 파견되어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제단체의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앞으로 남북대화가 계속되면 그것을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숙미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북 건강 증진 및 대북 보건의료체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손숙미 의원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손숙미 의원 국민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각종 통계에서는 우리나라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만큼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학교 무상급식의 실현, 만성병 관리, 영양 관리 등 사전적·예방적 건강관리의 강화를 통해서 선진 복지의 기틀이 마련될 때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손숙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민주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약속, 교육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대 실천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교 만족 2배, 사교육 절반을 이루어 누구나 학교 교육만 받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2006년 30조 사교육을 2012년 15조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매년 부담하

는 수십조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가계 부채요?

○김춘진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700조가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00조 원.

○김춘진 의원 국민소득은 어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국민소득이요?

○김춘진 의원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작년에 0.2% 정도 늘었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춘진 의원 GNI는 줄었습니다. 가처분소득이지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GNI라든지 디스포저블 인컴(disposable income)이라든지 경우에 따라…… 작년에 0.2%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조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춘진 의원 회사까지 포함하면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가계로 하면 줄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춘진 의원 사교육비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예, 늘고 있지요. 2008년에 4.3%나 늘었습니다.

가계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늘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GDP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춘진 의원 1.9배 늘었는데 가계 빚은 3.2배나 늘었습니다.

한국의 가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전체 소득이 1000조라고 치고 가계 부채가 700조인데 그것은 GDP에 비해서는 70%겠습니다만 가처분소득에 비해서는 그보다 훨씬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2009년에 142.6%나 됩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춘진 의원** 선진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부나 가게나 비교적 건전한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미국, 스페인, 일본보다 높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 계산은 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든지 간에 저는 우리 한국이 가게나 정부나 비교적 건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DPI 대비 가게 부채비율입니다.

가게 소득은 주는데 사교육비는 어떻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춘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공교육 강화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학원 수와 개인과의 교습하는 사람 숫자는 어떻다고 봅니까? 는다고 봅니까, 준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춘진 의원** 2007년 대비 2009년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김춘진 의원** 대충……

○**국무총리 정운찬** ……

○**김춘진 의원** 3만 7000개에서 5만 4300개로 늘었어요. 약 47% 늘었습니다. 개인 교습자도 13.6%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이 늘고 있는데 소득이 작은 사람, 하위 소득 20%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김춘진 의원** 하위 소득 20%가 과외비 지출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소득에 관계없이 사교육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상위 20%에 비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무래도 사교육을 덜 받지 않겠습니까?

○**김춘진 의원** 몇 배나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런 숫자에 익숙지 못합니다.

○**김춘진 의원** 2009년에 4.3배입니다. 2008년에는 3.9배입니다. 더욱 더 격차가 커지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춘진 의원** 사교육 절반 공약 보셨지요?

총리께서는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꾸 가네. 총리가 답변하는 건데 왜 가지?

아니, 총리가 답변하는데…… 왜 질문했는데 이게 자꾸 돌아가? 시계가 잘못됐어요.

아니, 총리께 질문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지요, 이게? 시계, 이게 잘못됐어.

○**국무총리 정운찬** 사교육 관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이거 컨트롤 잘 못하고 있어요.

아니, 질문을 하는데 돌아가면 안 되지요.

○**의사국장 이종후** 전광판에 영상이 띄워지면 타이머가 작동됩니다.

○**김춘진 의원** 아, 그래도 총리께 질문을 하면 답변 시간인데……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춘진 의원** 자,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마 사교육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자, 30조를 15조로 줄이겠다는 공약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춘진 의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것은 목표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지난 2년 동안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하셨듯이 늘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이것 반절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이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교육은 공교육이건 사교육이

건 간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사교육비를 반절로 줄이겠다는 공약.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좀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목표치인데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그것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늘었는데 성공했습니까? 반절로 줄이겠다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춘진 의원** 표를 얻기 위한 ‘빌 공(空)’자 공약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요, 저는 그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욕심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소득 격차에 따라서 심해지는 사교육비, 교육 격차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김춘진 의원**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춘진 의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 비록 의욕적인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지금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교원평가제 도입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교육법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원비 공개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법 개정안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이 공약을, 그렇게 하면 공약이 이행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입시제도 선진화 또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운영 유도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30조 원을 15

조 원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은 좀 과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공약, 표 얻기 위해서 했다고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표 얻기 위해서 했다고보다는 욕심이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진 의원** 전혀 지키지 못할 공약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들은 성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하고 처음에 그 목표를 참크게 잡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떻까요?

우선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하면,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노력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풀려고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춘진 의원** 자,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나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11월부터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만날 때마다 수 시간씩 토론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만 여러 가지 교과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예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들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했다든지 또는 그것을 포함해서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여기에 관한 프로젝트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잘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기숙형 고교, 이것이 150개인데 2008년도에 82개교를 했고 작년도에 68개교를 지정해서 총 150개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율형 사립고는 우리가 50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25개교, 마이스터고도 역시 50개

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21개교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진 의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절감되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썽요. 모든 것을 다 사교육비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연결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다양화 정책은 사교육비 플러스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소질이라든지 취향, 능력, 잠재력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교교육도 다양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김춘진 의원** 적성에 따라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개선됐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춘진 의원** 기숙형 공립고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기숙형 공립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0개가 이제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숙형 공립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숙형 공립고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에 세우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고가 잘되면 농촌을 교육 불모지로 생각하는 그 관념 자체가 벌써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다 군 단위에 기숙사를 갖췄지요? 면 단위 같으면 다 죽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군 단위에 갖췄습니다마는 군과 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행정적으로요. 군 속에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읍에다가 기숙형 학교를 지정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면 단위 학교는 다 죽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면 단위 학교는……

○**김춘진 의원** 기숙사 만드니까 거기 읍 단위 학교로 다 갈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뭐, 기숙형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아, 지금 300개를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고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150개이고……

○**김춘진 의원** 기숙형 학교는 150개, 마이스터

50개, 자율형 100개 해서 300개 다양화 학교 만들겠다고 그랬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게 전부 읍 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춘진 의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신입생 선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선발의 경우에 기숙형 학교는 그냥 일반 선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이스터고는 전형인데 인성, 적성…… 마이스터고가 전문학교로서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성을 많이 고려하게 되고, 자율형 사립고는 최종적으로는 추첨을 하는 그런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김춘진 의원** 기숙형 사립고는 생활기록부, 내신, 학교 시험, 면접으로 평가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시험, 학교 봅니다. 마이스터고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마이스터고는 인성을 중시하고 면접으로 합니다.

○**김춘진 의원** 적성시험도 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물론 적성을 중요시하지요.

○**김춘진 의원** 그런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21개교 지정을 하셨지요? 그 예산은 얼마나 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전문계 학교 중에 24%를 씁니다. 단, 학교 숫자는 3%에 불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다른 학교에 갈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시다시피 마이스터고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전문학교가 학생들이 졸업하면 주로 직장으로 가도록, 대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하여 만든 특별 학교라고……

○**김춘진 의원**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성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가 되니까요.

○**김춘진 의원** 아니, 2009년도에 12개 학교가…… 21%에 불과합니다. 평균이 19%입니다. 10%에

도 못 끼는 학교가 5개 학교나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취업하는 수가 21%에 불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어디에서……

○**김춘진 의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지금 시작했는데, 아직 취업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지정된 학교에서요. 그 학교에서 2009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취업률이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1학년으로 뽑는데요.

○**김춘진 의원** 2009년도에 마이스터로…… 지금 현재 지정된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러니까……

○**김춘진 의원** 아, 지정된 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정된 학교는 지금 마이스터고가 아니고 일반 전문학교였는데 그것이 마이스터고로 이제 지정이 됐으니 마이스터고로서의 앞으로 취직률은……

○**김춘진 의원** 그런데 이 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10%도 안 되는 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학교를 지정했냐는 거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 그 지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김춘진 의원** 취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취직에 가장 맞는 그런 학교를 고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춘진 의원** 자율형 사립고는 아무라도 갈 수 있습니까?

등록금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자율형 사립고는 그것이 평준화 지역이나 또는 지방 학교냐, 여러 그 저거에 따라서 그 수업료가 달라집니다만 보통 일반 학교 수업료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최종 선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추첨, 추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은 추첨에 당첨된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김춘진 의원** 학교성적은 몇 % 이내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처음에 50%라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그 재단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매년 그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만큼 또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50%를 설정한 겁니다.

○**김춘진 의원**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생들이 원한다면 50% 이내에 들면 그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춘진 의원** 이 300 프로젝트의 그 공약하고 다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더 첨가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20%를 뽑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서. 그래서 그 20%의 학생들은 경제능력과 관계 없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김춘진 의원** 아, 50% 성적에 안 들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기본입니다, 성적은. 그런데 경쟁이……

○**김춘진 의원** 누구나 골라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빈공(空)’자 공약에 불과합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잘 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영어공교육은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부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교육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교육 시장의 3분의 1이 영어교육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잘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개선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교육과정 그리고 그 평가방법, 이것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원어민 교사를 70%나 배치하고 또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렸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그걸 보면 영어수업에 과연 사교

육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다 완료가 된다면 급격하게 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사교육비가 무려 11.8%나 늘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어디, 영어 부분 얘기하십니까?

○**김춘진 의원** 그렇죠. 영어 사교육이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

○**김춘진 의원** 그래서 사교육비 인상의 주범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리가 추진하는 영어교육의 개선방안은 아직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사교육비가,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줄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임기 다 지나고 후임 대통령이 완성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춘진 의원** 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아줄 겁니다”, 어떻게 잘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입학사정관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대학들이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부작용이 뭐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뭐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입학사정관제로 가게 되는 경우에 입시기준이 애매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튀어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니다.

○**김춘진 의원**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겼습니다. 입학사정관 컨설팅, 사교육비로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입학사정관 컨설팅은 지금 소위 사교육 학원비에 계산하는 그 품목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앞으로 이것도 역시 고등 정보공개특례법, 그 속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춘진 의원** 분명히 그 법 개정하시겠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네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학교가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 잘 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성취도평가지험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학업성취도평가지험을 보고 그 시험의 결과로 뒤쳐진 학교를 작년도에 1440교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 지원을 했고 금년도 평가에 의하면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보강했다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행·재정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행·재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1400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당 평균 58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인턴교사도 거기에 파견을 함으로써 이 학교가 아주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배려를 받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래서 이 학력이 올라갔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기초 미달 학생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김춘진 의원** 재정도 미흡하고 지금 거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 명목이 아닙니다.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대책비용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그리고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11명 해임·파면, 중징계 하셨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이런 사회적인 갈등비용이 큼니다.  
일제고사 계속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지금 일제고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학업성취도평가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학생, 학업성취에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미국에서도 지금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많은 정책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키워 나가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3학년 학생 졸업하고 나면 기초학력 미달자 어떻게 하죠? 3학년 때도 시험 보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그 시험시기를 그 전에 12월로 했던 것을 7월로 앞당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려고 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런데 지금 왜 안 고쳤습니까, 그걸 뻔하게 알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 그것 이번에 고칩니다.  
금년도에는 7월에 봅니다.

○**김춘진 의원** 자, 학생들이 낙인이 찍힙니다.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그 학교에서 다 알게 됩니다. 인성교육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김춘진 의원** 학교서열화 시켰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학교서열화 전부 다, 전국 모든 학교 1등서부터 다 서열화시켰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춘진 의원** J신문에서 보도해 가지고 다 됐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뭐 언제 서열화가

됐습니까, 그렇게?

○**김춘진 의원** 모든 학교 서열이 짝 나왔죠.  
신문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니까요, 그건.  
저희 교과부에서 서열화해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일제고사 성적 언론사에 쥐 가지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일제고사 성적은 서열화보다 세 단계로 이것을 나눠서 평가하고 그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확히 서열화가 되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 가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맞춤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라는 예를 들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 같은 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를 지금 확산하는 과정에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서 학력 중점 향상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를 지정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무슨 전원학교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의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밥 못 먹는 학생한테 밥 주는 게 맞춤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춘진 의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학생부터 해서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가서는 우리 학생의 한 26%가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춘진 의원** 그런데 방학이나 주말에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약 20만 명이나 돼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특히 방학의 경우에는 그것이 복지부 산하로 돼 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하고 복지부가 학생들 명단



이런 것을 정확히 서로 공유해서……

○**김춘진 의원** 4만 불 선진국을 구가하겠다는 국가에서 20만 명이나 밥을 못 먹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니, 20만 명을 못 먹이는 게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김춘진 의원** 점심을 굶는 학교가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부장관 나오십시오.

무엇이 문제고 해법은 뭐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의원님, 학교 무료급식 인원과 방학 중에 아동급식 인원이 20만 명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바로 그 아이가 굶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무료급식 사업은 급식비를 내기 곤란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사업은 이렇게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 중에도 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밥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은 굳이 급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개개의 사정을 지자체와 학교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실제로 그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공부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방학 중에 필요한 인원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진 의원** 굶는 아이가 생기면 이 말씀 책임지시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책임지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저희들은 없도록 지금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책임진다고 총리께서,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자, 안병만 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도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동의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 사람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이미 조사해서 한 사람도 없어서 안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

○**김춘진 의원** 있기는 있는데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마는 정부로서는 한 사람도 굶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하는데 반대로 사교육비는 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사교육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을 때 사실 사교육비는 완전히 줄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꼭 사교육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비는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사교육 대체교육을 우리가 발전시키면 또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EBS 같은 데서 사교육에서 하는 교육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 그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고.

그다음 끝으로는 이 사교육 시장,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질서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공교육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원평가제 같은 그런 제도로써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교육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되면 가장 확실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사교육 대체수단으로써 EBS나 방과후학교 이런 것이 잘되는 것은 그보다 속도가 좀 빠르게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더 빠른 속도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김춘진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절반이라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목표는 한번 우리가 과감하게 잡아볼 만한 그런 목표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나 늘어나는 것도 그 속도를 한번 보면……

○**김춘진 의원** 그러면 정책수단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부터 2006년인가요, 그 당시의 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12%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라고 봅니다. 물가상승률까지 다 따진다면 사교육비 증가는 크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냐? 이제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봅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 나오십시오.

사교육비 절반 목표 잘못된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욕은 크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 큰 의욕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춘진 의원**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반절로 줄이겠다는 목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인 못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른 사회현상도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임기 중에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그랬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임기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춘진 의원** 그러면 3년 이내에 낮추겠습니까, 반값?

○**국무총리 정운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약속 못 지키면?

○**국무총리 정운찬** 의욕 찬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표 얻기 위해서 거짓 공약한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니까?

○**김춘진 의원**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공약.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거짓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진 의원** 아, 그러면 이것도 누가 보스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럼 어느 보스가 시켜서 이 공약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 걸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김춘진 의원** 의원들이 보스가 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보스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서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김춘진 의원** 안병만 장관님, 나오십시오.

2월 3일자 한국일보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2월 3일자 한국일보요? 어떤 기사가 거기에 나왔었습니까?

○**김춘진 의원** 우리 이주호 차관이 수도권 부교육감 A 씨를 만나서 출마 포기 종용했다는 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거기에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교과부에서 앞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그런 권고를 한, 그런 기사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이주호 차관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A 씨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 A 씨를…… 글썄요, A 씨가 부교육감이라면 차관이 부교육감을 만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A 씨뿐만 아니라 어느 교육청의 부교육감도 교과부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어떤 사실이라면 말씀하십니까?

○**김춘진 의원** 출마 못 하게 한, 사실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것은 뭐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할 수 밖에……

○**김춘진 의원** 사퇴시키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사죄요?

○**김춘진 의원** 사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사퇴요? 그것은 제가 사퇴를 시키고 안 시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장관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웃음)

그것은 뭐……

○**김춘진 의원** 소규모학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김춘진 의원**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 통폐합 잘 되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소규모학교들, 소규모학교들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또 계속 길러야 할 학교는 기르고 그렇게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춘진 의원** 왜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학교로서 존립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주요인입니다.

○**김춘진 의원** 복식수업과 상치교사 문제, 그것을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평가한 적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뭐 당연히 평가가 됩니다.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명인데……

○**김춘진 의원** 자, 그러면 평가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한 교실에 1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뭐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숫자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상치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면 이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습니다, 소규모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래서 통합하면서 저희가 전원학교, 전원학교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오히려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농촌학교를 만들어서 도시 학생들이 오히려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학교를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원학교 프로젝트입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 나오세요.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춘진 의원** 취임 연설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를 여덟 번 사용했습니다. 금년에 몇 번 사용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금년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론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정몽준 대표도 사용했습니까, 지난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도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문에, 최근의 연설문에서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 나왔다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적다의 그 척도는 꼭…… 꼭 그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신년 국정연설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과학기술을 확대한다고 과학기술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지금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만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가 2008년에는 11조 원이었던 것이 2012년까지 16조 원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정부의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었는데 R&D 예산은 10.5%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는 우리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잘 살려면 과학기술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만이 우리 한국 경제를 제대로 살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대통령의 공약은 뭐지요? GDP 대비 얼마 쓰겠다고 그랬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진 의원** 과학기술에 얼마 쓰시겠다고 그랬냐고, 목표가, 공약이?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기억 못 합니다.

○**김춘진 의원** 5%입니다. 어떻게 잘 달성돼 갑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못 지키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때 임기 끝납니까.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개편할 의사가 없습니까? 여성부로 청소년·가족 업무 이관했지요? 또 과학기술 사람들에겐 근정훈장 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훈법 개정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현재 과학자들이 과학기술훈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정훈장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그러니까 과학기술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지요.

미래의 먹을거리는 어디서 나오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김춘진 의원 과학기술에서 나오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 미래의 먹을거리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경제의 장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도 과학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훈장을 받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근정훈장 대상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돈 안 드는 거라도 좀 해 주십시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기가 지진 다발지역인데 어제 팡 소리 들었지요, 지진?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춘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3도 이상 지진은 179건인데 이 중 내륙에서 발생한 89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8건, 충남이 5건, 충북이 1건으로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 지반은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화강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질구조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3층 이상 건물은 건축법령에 따라서 5.5~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시공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세종시로

정한 것은 정치적이니까, 정치적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법률이다 제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을 통과시켜 주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에다가 거점 도시를 설치할 것이냐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입니다만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세종시에 두어서 세종시가 한국 과학 발전의 거점 도시가 되도록 하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김춘진 의원 아니, 중이온가속기가 들어갈…… 지질조사도 않고 건의를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질조사 다 했습니다.

○김춘진 의원 안 하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했습니다. 지금……

○김춘진 의원 교과부장관 나오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교과부장관이 11월 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월 달에 성균관대학의 홍승우 교수팀이 가서 전부…… 서류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춘진 의원 그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세종시에 정해 놓고 지질조사 하는 것이 정치적이니까, 미리 다 전국에서 어디가 적합한가를 조사한 다음에 정하는 것이 비정치적이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전국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다 조사하겠습니까? 가능성 있는 도시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프로세스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모릅니다.

○김춘진 의원 1차로 압축된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김춘진 의원 열여덟 군데입니다. 전국을 다 조사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음,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것 어떻게 된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일괄 이전이 맞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부처 분할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의 원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구획공사의 본사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서 경남·전북 간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므로 양측 합의에 기초해서 현실에 맞게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어제의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각 도에서 제시한 것 봤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전북하고 경남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 경남은 일괄배치안을 제시했고 전라북도는 24.2 대 75.8안, 분산배치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도 없이 밝힌 정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게 옳습니까, 거기에 거역하는 게 옳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국토해양부가 연구하고 결론 내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본 의원 앞에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약속했습니다. 이제사 또 검토하겠다고만 만날 검토, 검토합니까? 세종시처럼 또 다시 검토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곧 결론이 날 겁니다.

○**김춘진 의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정부를?

○**국무총리 정운찬** 좀 기다려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김춘진 의원** 새만금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춘진 의원** 세종시는 몇 번 갔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세종시 자체는 몇 번 안 가 봤지만 그 인근까지 합하면 여덟 번 가 봤습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가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여러 번 계획되었었는데 국회 일정상 또는 정부의 일정상 아직 못 갔습니다만 곧 갈 예정입니다, 2월 달엔.

○**김춘진 의원** 새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계획대로 잘 집행할 겁니다.

○**김춘진 의원**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의욕에 넘쳐 있습니다. 잘할 것입니다.

○**김춘진 의원**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발표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구체적으로 금액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습조가 들어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한다는 것은 정하지 못 했습니다만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춘진 의원** 거기를 맡고 있는 위원장이 새만금에 한 번도 가 보지도 않고 국가의 20조가 넘는 돈을 쓰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현장도 안 가 보고 20조 계획을 하니깐 이렇게 재원 조달계획도 없이 발표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세 번이나 계획을 세웠다가 못 갔습니다. 국회 또는 정부의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곧 갈 겁니다.

○**김춘진 의원** 새만금 예산 얼마나 쓸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 20조, 30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큰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민자도 필요하고 또 정부의 예산도 후일에 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대답 드리기 힘듭니다.

○**김춘진 의원** 언제까지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기한을 정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지금 제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지금 몇 조 더 넣는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저희 새만금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으니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총리께서 총 책임자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무리 총 책임자라 할지라도 예산을 몇 조 더 넣느냐, 안 넣느냐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춘진 의원** 새만금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는 정말로 복합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자, ‘물의 도시’ 특성을 살리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춘진 의원** 그러면 수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수질은 당연히 최고급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춘진 의원** 몇 급수로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 그것을 제가 지금 자신 있게 2급수다 3급수다 이런 말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가장 좋은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아, 이것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것 같으니까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춘진 의원** 말 바꾸기를 자꾸 해요, 정부에서!

(「목소리 낮춰서 질문하세요! 총리 귀 안 먹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소리를 낮추시라고요. 듣기에도 민망하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정운찬** 여건이 허용하는 한 가장 좋은 물로 만들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근본적인 수질 대책 수립하시겠습니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춘진 의원** 새만금은 경쟁력 있는 새만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하면 철도, 고속도로, 항만, 항공, 비행장 전부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9월 MBC PD수첩에서 전교생 26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남한산 초등학교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육공동체로 만들기까지 교사의 헌신,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고사, 특권층을 위한 학교 다양화, 교과중심의 수업, 교육공시 등 줄세우는 경쟁과 교육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하게 하는 교육정책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즐겁지 않은 공부가 창의적일 수 있을까요?

사지선다형, 단 한명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일제고사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가리는 도구는 될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0여만 명의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자신의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다고 밝히고 5대 실천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한 소규모 학교를 부러워하며 동시에 학습지 숙제, 학교 교육, 일기, 독후감 등으로 찌들어 사는 자신의 아이 모습을 슬퍼하는 한 어머니의 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무얼 위해 이러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행복할까요? 결국 좋은 직장, 부유함 등을 위한 거니까 그럼 행복해지는 거 맞아요? 누가 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윤성** 김춘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진 의원님이 저하고 잘 통하기 때문에 이해는 해 주실 줄 믿겠습니다마는 김춘진 의원의 주특기가 단답을 요구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면 ‘야, 때가 왔다’ 해서 정책설명을 중구부언하다 보니까 다른 분은 30분이면 끝나는데 지금 1시간이 넘었습니다.

답변하는 국무위원들, 아주 명쾌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으로 대신해 주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2시 반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3시, 3시!」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2시로 하고요, 제가 협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늦어질 겁니다.

(「그러지 말고 3시, 3시!」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보환 의원 소개로 경기 화성을 지역구민 서른 분이 와 계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을 출신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우리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올해 2010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계적 경기 침체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 선진국 도약의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 분야도 올해만큼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자,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본 의원은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 학교 간·교사 간 경쟁 촉진의 원년, 국립대 법인화의 원년,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원년, 그리고 신 과학입국의 원년이라는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5대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을 감히 제안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감사합니다.

○**박보환 의원**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규모가 20조 한 9000억,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불법과외 등 사교육비 지하경제 한다면 한 14조 원대 추산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의원** 그런데 작년 2009년도의 사교육비 한번 추산해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추산한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박보환 의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의원** 장관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오전에 우리 총리께서는 사교육비가 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교육비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러니까 사교육비의 증가 속도가 줄었습니다.

○**박보환 의원** 증가 속도는 줄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평균 12% 정도 상승을 계속했거든요. 그것이 2008년도에 와 가지고 4.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은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보다 좀더 내려간 것으로 되고 금년도는 기대하기로, 지금 원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교육비가 네트로 줄어드는 원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보환 의원** 예.

그런데 장관님 취임하신 지가 지금 1년 6개월 되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취임하신 지 한 1년 6개월 되었으면 어느 정도 사교육비 절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언제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야 하는데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약화시킨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 쪽에 많기 때문에 대략 이명박 정부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교과부가 많은 정책들

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EBS발 교육혁명이 그 견인차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동의합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EBS 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자주 봅니다.

○**박보환 의원**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EBS 방송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EBS 방송이 사실방송, 인터넷방송 이런 것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EBS는 그동안에 소위 스타강사라는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계속 강사로서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 또 방송 내용이 너무 정형화돼 가지고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참신하게 개선될 때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오전에도 답변 시에 사교육 대체수단으로서 EBS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EBS가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수준이 역시 아직도 사교육 업체에 비해서 낮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강남구청 인터넷강의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향후 EBS 개혁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E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EBS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교육비 대체수단으로서 정착화해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한 50명의 스타강사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타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강사를 1월부터 확보했고 그래서 고급강좌라든지 수준별 맞춤형 강좌 이런 것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전년 동기예 비해서 EBS가 히트하는 수가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EBS 수능 사이트 점유율이 18.9%에서 27.4%로 경증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강사 강의 이것을 계속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EBS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문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가 MOU를 맺어 가지고 수능시험이 EBS 내용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보환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게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지금 국민들은 EBS발 교육혁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EBS 수능강의만 들어도 수능 만점을 얻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요즘 강남에 소위 ‘뜨는 학원’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요,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나온……

○**박보환 의원** 예,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이에 대한, 뜨는 학원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뜬다는 말이 왜 생겼느냐 하면 입학사정관제가 막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좀 잘 안다는 학원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아주 긴밀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컨설팅 작업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BS가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속 시원하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홍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은 학원에 가지 않고 EBS만 봐도 입학사정관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 어쨌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모범 해답은 역시 공교육을 살려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수능 및 입시체제를 과감히 개편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동의합니다.

○**박보환 의원** 공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는 것이 바로 사교육 대책의 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의원** 장관님,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질에 달렸고 교사가 바뀌면 학생도 바뀝니다. 그리고 수업이 바뀌면 학교도 바뀝니다. 그 핵심에 저는 교원평가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올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법제화와 상관없이 시행하겠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법적 하자는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는 이번 2월 이내에 이것을 꼭 교육과학기술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라도 조금 늦어지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도 교육감 책임하에 교육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을 전부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혹시 법률이 좀 늦어진다고 해도 일단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박보환 의원** 어쨌든 교원평가제가 시행될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박보환 의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의 86%, 교원의 69%가 이 제도를 찬성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우리 국회에서도 어쨌든 관련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부탁드립니다.

○**박보환 의원** 그다음에 학교 간, 교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바로 학교정보공시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현재 공시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39개가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 39개지요? 앞으로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 늘리려면 시행령 개정해야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9개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박보환 의원** 9개 정도 늘립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이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와 또 직결되기 때문에 공시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또 최근 전교조 가입교사들이 불법으로 정당활동을 해서 범법자가 되거나 또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조 가입교사 담임 거부운동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은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누가 전교조 교사인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알 길이 없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의원** 장관님 임기 중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제 생각에는 학부모의 소위 알권리 보장 그런 차원에서는 전교조 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라도 교육과 관련된 집단의 가입교사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법률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유관기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이 문제는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그래서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이 명단을 즉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붓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장관님께서도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교육계 비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고 수천만 원 금품 수수한 사건, 그것 참 충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교육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우선 먼저 시·도 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비리가 그동안에 많이 터져 나왔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학사 자리를 놓고 비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 그 이유는 장학사가 장학사도라든지 교원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를 지도감독도 하고 또 승진·전직에도 유무형의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또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보환 의원** 교육계의 비리 사슬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데도 이 처벌은 늘 솜방망이라 좀체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비리가 일상화된 것은 아닐 것이고요. 또 교육계의 제 식구 봐주기 식의 미미한 징계로는 이번에도 지금 장관님의 말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번 장학사 독직 사건을 교육계 정화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성을 다하는 대다수 교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좀 뿌리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그리고 또 우리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가 국립대 법인화 문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의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정말 국립대 법인화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그 법인화는 사실 대학이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선진시스템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들이 법인화를 민영화로 오인하거나 또 법인화되면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오해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관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대학이 법인화되면 재정 지원이 중단되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은 계속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국립대학으로 있을 때 받던 여러 가지 제약,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도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100대 대학 내에 드는 대학이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든다고 해도 저는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GNP—아, GDP 수준—그러니까 세계한 15위 이내 되지 않습니까? 그 수준으로 대학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까지 많은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벗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법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걸 굉장히 권장하고 싶습니다.

○**박보환 의원** 서울대에 법인화 초기 정착금으로 올해 269억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서울대 법인화는 다른 국립대 법인화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어떻습니까? 다른 국립대들도 법인화될 때 이와 같은 지원 가능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국립대의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보환 의원** 그런데 법인화가 재정 감소, 학비부담 가중 그리고 학생수 감소 그다음에 국립대 역할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또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울대 법인화 법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고맙습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감사합니다.

○**박보환 의원**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세종시 문제로 교육현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 총리,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나중에 16달러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자, 투자효과가 가장 뛰어난 교육인데요.

총리께서는 대학의 총장님을 지내셨는데 요즘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보다 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언론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

○**박보환 의원** 어떤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15 대 1, 심지어 24 대 1까지 경쟁이 치열한 지역도 있다는 거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보환 의원** 총리,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교육의, 보육 또는 교육의 질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국공립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내고 사립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수업료를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박보환 의원**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이 5만 원, 사립 유치원이 30만 원이라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보환 의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결국 뭘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무래도 국공립을……

○**박보환 의원** 증설하는 것이지요? 더 증설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보환 의원** 그러면 문제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보환 의원** OECD 국가들의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이 GDP의 한 1%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GDP의 0.47%밖에 되지 않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보환 의원** 총리께서 우리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예산 확대 계획이 있으시면 국민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난 몇 년간 계속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재정 규모라고 하는 게 지금 1년에 한 1조 5000억 정도 늘었고 보육 분야도 1년에 2조가 넘게 났습니다. 이것은 이용 아동의 60% 수준인 한 80만 명의 보육료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박보환 의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그리고 재정 확대와 더불어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유아교육하고 보육정책의 체제 통합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된 시스템에서는 유아교육 선진화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리께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보육이나 유아교육이나 그 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기능이 유사한 형태로 수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지만 그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다면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보환 의원** 어쨌든 정부가 영아보육,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총리께 건의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리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유아교육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시다마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어기지 마라' 이런 말은

대학이 아닌 유치원에서 이미 배운 것들입니다.

신뢰란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의 피와 같습니다. 피가 혼탁해지면 사람이 살기 어렵듯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세종시 수정의 이유를 효율성으로 말씀하십니까마는 그 효율성은 총리의 직관에 의한 것이지 경험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올 한 해를 선진국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사적·경제적 국력만으로 선진국이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시민의식, 국제적 위상 그리고 문화 수준 등에서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선진국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드 파워 위에 소프트 파워를 쌓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이, 정치인이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일입니다.

경제학자이자 대학 총장을 역임한 총리답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저는 세종시 총리보다는 경제총리, 교육총리가 정운찬이란 이름에 훨씬 어울린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세종시 문제를 빨리 풀고 경제와 교육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감사합니다.

○**박보환 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장관님, OECD가 발표한 PISA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학생들의 과학의 흥미도가 57개국 중에서 몇 위 하는 것, 우리 장관님 잘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의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과 또 다른 통계는 수학·과학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력 면에서는 세계 톱 텐(top ten)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도·흥미도 면에서는 라스트(last)에 속하는데 그게 열심히는 했지만 결국은 별로 재미없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동기 부여가 좀 그렇게……

○**박보환 의원** 재미도 없지만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공하는 경우에 과연 비전이 있나 없나 그것도 관심의 분야…… 결정하겠습니다.

○**박보환 의원** 제가 오늘 신과학입국의 원년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 신과학입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학·과학 교육 내실화,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데요 딱히 정부정책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글썄, 이렇게 수학·과학 교육의 내실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초·중·고, 모든 초·중·고의 실험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면 거의 모든 학교가 현대시설을, 실험실을 각 갖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학·과학 교과교실제, 소위 맞춤형 교육이지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과학과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과학중점학교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동기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사들 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교사들 훈련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겠다고 최근에도 공언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수학·과학 교사의 연수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보환 의원** 장관님, 어쨌든 과학기술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 대책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그렇습니다.

○**박보환 의원** 요즘에 연구원들 정년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의원** 정년 연장을 비롯해 우리 과학기술인들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연구원의 사기 진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들의 정년을 늘려주는 그 부분이 제일 큼니다. 원래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원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좀 힘들고 해서 선별적으로 우수한 연구원들에게는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혹은 다른 석좌제 같은 제도로써 그것을 커버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금, 연구 지원 이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미래는 결국은 오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개발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아주 매치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 더욱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교과부 출범으로 인해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학연 협력인데요. 그 대표적 모델이 특화전문대학원이지요. 작년부터 시행된 특화전문대학원 운영이 제자리 걸음인데 특화전문대학원 확대 계획 없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충남대가 공동으로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특화전문대학원으로 융복합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2개 하고 또 12년도에 2개 더 해서 12년도까지 총 5개 혹은 그 이상의 이러한 특화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보환 의원** 하여튼 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요. 관심 가져 주시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박보환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고맙습니다.

○**박보환 의원** 프랑스의 경제학자 겸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의 말을 소개하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탈리는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11대 강국 중에서도 최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정책 교육정책 이민정책의 개혁이 강력히 요청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은 수업의 양을 줄이되 노동시장의 현실과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육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박보환 의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英姬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의 정영희 의원입니다.

국가의 정책은 신뢰가 최우선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마저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丁英姬 議員** 오늘이 마지막 날이시기에 좀 몸이 풀리시지 않으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丁英姬 議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2월 2일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이자율을 5.7%로 낮추는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타 정책자금 대출보다 높은 금리와 군 복무 기간에도 발생하는 이자 문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평생 채

무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취업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군 미필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총리님,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혜택을 주지는 못해도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본 의원은 최소한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이자는 면제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법률자문을 한 번 받았습시다. 그랬더니 군 복무 중인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물론 병역……

○丁英姬 議員 어떻게요? 불이익이 될 수 없다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군 복무 중인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률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예우 문제는 사회적 합의 등 공론화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것입니다. 학자금제도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결국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야 되겠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준다면 매년 최소 약 11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대출 이자 면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시다.

정부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자금 대출 및 민간 대출에서도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자 등을 면제하는 사례는 없다고 법률자문관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丁英姬 議員 그러니까 면제를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丁英姬 議員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군 복무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이자 면제가 없다면 정말 면

제 안 하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엄청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군 복무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다른 측면에서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꼭……

○丁英姬 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6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丁英姬 議員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서 1160억 원이 들어가는지?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군 복무자의 한 50%가 대출을 받았다고……

○丁英姬 議員 약 몇 만 명이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되면 25만 명 정도 되고요. 1년에 물론 등록금이 이보다 더 되겠습시다만 평균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잡고 이자를 5.7%로 잡으면 25만 곱하기 800만 곱하기 5.7이 대개 1140여 억 원 정도 나옵니다.

○丁英姬 議員 그런데 다른 데에 소요되는 그러한 큰 돈보다 1160억 원이라는 돈이, 그런 규모라면 수용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돈으로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이것은 정말,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돈도 벌지도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젊은이들한테 이자까지 내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문제입니다. 잘 상의하셔서 이자 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대다수의 대학들이 학교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대학 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부담률은 OECD 평균의 69%에 불과합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도 대학총장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OECD 국가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84%고 OECD 국가는 대학 진학률이 한 65% 되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국립대학 비율은 대개 한 67%, 70% 정도 되는 데 반해서 한국의 국립대학 비율은 한 20%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래는 결국은 대학에서 교육을 잘하느냐, 또 연구를 잘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GDP의 1% 정도를 대학 교육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丁英姬 議員**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존립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의 확대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丁英姬 議員**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3일 불법 낙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서울중앙지검에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료기관 세 곳을 고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丁英姬 議員** 현행 모자보건법에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유전되는 특정 전염병 질환, 성범죄로 인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형법은 불법 낙태를 한 장본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해 약 35만 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95% 이상은 미혼이나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 등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1년에 30만 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임신 여성과 의사를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낙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태 문제는 생명 존중 차원에서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모체의 건강 등을 위해서도 낙태 범위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사회적 합의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교계나 여성계 또 시민단체 등……

○**丁英姬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상당수의 국민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고, 반면에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므로 임신중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불법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안 하셨으면 하는 말씀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될 수 있으면 생명 존중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태 허용의 범위를 될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물론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로 생명이 경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도 즐거운 마음으로 낙태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으면서 피치 못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 왜 이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낙태 말씀이십니까?

○**丁英姬 議員** 예.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애를 낳아서 보육하고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서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긴 되지만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 환경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출산을 원치 않는 여성들에게 무조건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낙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미혼모와 장애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총리님의 지금 견해는 무조건 낙태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직 경직적인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계 또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OECD 회원국의 임신중절 허용 기준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17개국은 본인 의사 등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의 국가에서도 나이, 혼인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태아에 이상이 있는데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일랜드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매년 수십만 건이 시술되고 있는 임신중절수술을 불법행위로 무작정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해서 임신 기간과 임신 여성의 상황 등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丁英姬 議員 그렇지요?

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여성부장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관련 부처 및 여성계, 법조계, 의료계 등과의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총리님, 법이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丁英姬 議員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보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법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이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구금시설의 수감인들에게도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에서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완벽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그렇다면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의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와 수용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교정기관의 의료시설은 아마 의원급이 아닐까 생각하고 따라서 민간 수준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부에서는 종합병원급 의료 전문 교도소를 앞으로 설립할 것이고 또한 교정기관하고 외부 병원하고 원격진료 시스템을 운영해서 수용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감사합니다.

오늘 총리님은 세종시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안히 계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丁英姬 議員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구금시설 내의 의료사고에 대한 진정서 접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 사례들이 인권침해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되고 있습니다. 수감인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소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행하는 소견서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호흡정지나 돌연사 등이 우려되어 지속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이 환자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입니다. 현재 서청원 대표는 수형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병 치료를 위한 형 집행정지의 연장 신청이 기각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고 있습니다.

수형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丁英姬 議員 이렇게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이런 분한테 수형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들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들어가시게 하셨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병원장께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丁英姬 議員 병원장께서 그렇게 들어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감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게 아니고 수감생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병원장이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그래서, 판단해서 이렇게 어렵게, 호흡 곤란하고 밤마다 산소를 마셔 가며 주무셔도 굉장히 어려운 그분한테 어떤 분이 ‘그래, 너 감옥에 가서 살아라’ 하고 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썄, 저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법에 따라서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丁英姬 議員 서청원 대표는 지난 1월 31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의식불명으로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대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니까, 검찰의 판단이 정확하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의사의 판단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만약 교도소 내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긴급했던 상황입니다.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수감 중에 만의 하나 불상사라도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누가 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리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丁英姬 議員 이렇게 책임을 못 지켰다면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수감을 결정하신 겁니까?

다시 한번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

○丁英姬 議員 잘 안 보여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시……

○국무총리 정운찬 예, 서청원 대표님……

○丁英姬 議員 예, 알아보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진 우측에 보이는 의료기구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

○국무총리 정운찬 호흡기입니다.

○丁英姬 議員 예, 잘 아십니다. 산소호흡기입니다. 현재 서청원 대표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법 집행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장마비의 우려 등으로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하고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도 서청원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아마 의원님이 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습니까?

○丁英姬 議員 예.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다면 그것은 제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丁英姬 議員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그런 총리신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서청원 대표 형량에 대해서도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모 정당의 대표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서청원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서청원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개인적인 금품수수나 비리가 전혀 없었던 점, 심각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법의 대원칙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청원 대표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이 필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청원 대표 사면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하신 바 있는데 서청원 대표의 사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이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역시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꼭 좀 우리 대통령께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을 좀 사면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려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법무부장관 이귀남 국무위원석에서 — 정

영희 의원님, 법무부장관입니다.)

○**丁英姬 議員**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고서……

(○법무부장관 이귀남 국무위원석에서 — 서청원 대표의 건강 상태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없을까요?)

제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 마무리하고 다시 갖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국무위원석에서 — 지금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지 않……)

마무리하고 다시 들겠습니다. 마무리 말을 못하면 끝을 못 맺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고 다시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각각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청원 대표의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동참해 주신 220여 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적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소외받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원칙과 신뢰가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丁英姬 議員** 시간이 남았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청원 대표님 불편한 상태에서 들어오셨는데 그 상태에서는 수감생활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검사가 판단을 했고 물론 그때 의사의 진단서도 판단했고 의사님 말씀도 다 들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감생활은 맥박이나 호흡 다 정상이시고……

○**丁英姬 議員** 지금 밤에 어떻게 지내시는 것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산소호흡기는 전혀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丁英姬 議員** 그러니까 참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이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사실은 오늘 총리님한테 세종시에 대한 것을 파고 들어가서 하려고 했다가 저의 전문적

인 거를 생각할 때 서청원 대표님 밤에 못 주무세요. 밤에 자다가 막 사지 마비가 오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 말도 여기서 했습니다. 너무나 흥측해서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감생활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 집행정지로 그렇게 다시 또 나가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그러면 그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님께, 어떤 대표의원님들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렇게 형 집행정지고 우리 서청원 대표님한테는 1년 6개월이라는 그런 법을 내리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김노식 전 의원님한테도 형 집행정지 연장을 다 헤드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있는 분은 다……

○**丁英姬 議員** 집행정지 연장 저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형을 받은 게 너무 억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좀 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이귀남** 거기에 있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이니까요. 하여튼 형 집행정지 상황이 되면 바로 헤드드리겠습니다.

○**丁英姬 議員** 아주 상쾌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상쾌한 대답을.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丁英姬 議員** 오늘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희상** 정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문경 예천 출신 이한성 의원입니다.

일부 법관의 상식을 벗어난 편향된 판결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법의식을 벗어난 판결에 대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조차 속이 터진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도 법원의 어리둥절한 판결이 속출하는 데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으로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달성을 추구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소한으로 침해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이것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법부에서는 대부분의 법관들이 사회정의 수호와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법관들이 주관적인 이념을 재판에 투영하여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것이 정의인지를 알 수 없게 하고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 저희 한나라당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법원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고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대정부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세요.

최근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PD수첩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그 판결 좀 읽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자세히는 못 읽어봤습니다.

○이한성 의원 판결이 좀 복잡하고 또 우리 총리께서는 할 일이 많아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공소 사실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좀 제가……

○국무총리 정운찬 대강은 압니다.

○이한성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MBC PD수첩 사건 말씀이시……

○이한성 의원 그렇죠.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2009년 6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그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했고 민동석 수입협상 대표 및 정운찬 농식품부장관 명예훼손 그다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업무를 방해한 것 등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에 제1심이 나왔는데 그건 무죄가 선고됐고 1월 21일에는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거기에 이제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섯 가지 허위사실 좀 압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도 조금 압니다만……

○이한성 의원 그게 제가 좀 요약하자면 주저앉는 소는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에는 주저앉는 소가 많더라, 그런 영상을 보여 주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그래서 미국에는 광우병 소가 많음을 굉장히 암시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그다음에 미국인 아레사 빈슨, 죽은 어린이, 사실은 광우병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인간 광우병으로 계속 그렇게 끌어다 붙인 해설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그다음에 한국인은 유전자형이 특별해서 광우병 병든 소 먹으면 바로 94%가 인간 광우병에 걸려서 죽는다, 이런 단정도 내렸지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해서 실태를 보지도 않고 광우병 위험을 몰랐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쇠고기 수입협상을 벌였다, 이런 내용도 있지요? 그래서 졸속 협상의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 다섯 가지 부위가 수입되게 되어서 이런 광우병 소의 부위가 들어오면 한국인은 이제 광우병에 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그 PD수첩 봤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강 지나가는 것은 읽어 봤습니다.

○이한성 의원 아, 그 방송도 봤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당시에……

○이한성 의원 당시에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소위 다운이라고 하는 소 그림도 보고……

○이한성 의원 아, 그러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보도를 자세히는 못 봤지만 대강 봤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 국제기준에 따른 다양한 분류기준과 미국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당시의 보도는 저는 상당히 왜곡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광우병 소가 미국에는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그냥 굴욕적으로 협상을 제대로 못해서 많은 부위가, 광우병 걸린 위험 부위가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 한국인은 특이체질 때문에 먹으면 한 94%가 죽는다는 이런 내용을 보도해 가지고 도대체 저런 공무원이 있는가, 저런 장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만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 자신도 정확한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아주 컸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유모차를 끌고 온 어머니도 있었고 여중생들 “나 죽기 싫어요.” 하면서 거리에 뛰쳐나온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며칠이 걸렸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한 한 달 이상 거리로 나왔지요? 걱정되고 분노에 차고 격노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정확한 날짜, 며칠 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97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미국에서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그렇게……

○**이한성 의원** 지금 그리고 쇠고기 추가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대체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한국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중에서 광우병 걸린 부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게 세상을 떠들게 한, 소란하게 하고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런 사건이 도대체 지금 한 2년 전에 그렇게 광풍처럼 휘몰아쳤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한성 의원**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태산을 흔들고 진동케 한 혼란 속에서 나중에 보니까 쥐 한 마리가 그렇게 흔들었더라, 이런 내용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맞습니다.

○**이한성 의원** 정말 태산을 명동케 한 일에 서일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그런데 그렇게 어렵사리 증거를 잡아서 기소를 했는데 이것이 무죄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무죄 이유 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런 것 같습니다. 형사 재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 판결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한성 의원** 예, 언론 보도 중심으로……

○**국무총리 정운찬** 허위 보도가 아니거나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과장했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무죄 선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그게 정말 단순한 과장 정도겠습니까? 사람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쇠고기를 먹으면 94%가 죽는다, 이것 단순 과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단순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재판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물론 그런 자세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걱정하고 있으니까, 다만 상식으로 우리 총리님께서 경제학자로서 또 상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그런 것이 과장이 아니고 왜곡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좀 답답합니다.

○**이한성 의원** 그리고 분류기준에 따라서는 수입산 쇠고기 중에서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수도 있다고 정의를 이렇게 조작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또 ‘무슨 언급을 다소 뺐기 때문에 그것도 뭐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한성 의원** 이 모든 것을 ‘고의가 없다’ 이렇게 했지요? 고의와 목적은 어떻습니까? 고의와 목적 차이 좀 아십니까?

의도한 것하고 또 고의를 단순히, 어떤 범죄를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고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엄격한 게 아니고, 의도라는 것은 ‘해코지할 의도’ 그런 것이지만 고의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난다는 것 정도를 인식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어떤 행위를 과감하게 하는 것 그 정도가 고의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어떤 것은 조작하고 해 가지고 어떤 사실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다 무죄로 됐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판결……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그러다가 PD수첩에서 결론은 정운찬 전 장관과 실무협상단을 친일매국노에 비유된다고 했습니다.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애국심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분들도 애국심이 넘치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그런 협상을 맺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럼요. 제가 두 분 다 만나 봤습니다. 정말 애국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이런 분들을 친일매국노, ‘친일매국노’가 됩니까?

친일 제국주의,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매국노, 그에 비유를 했는데 총리로서 직접 부하는 아니지만 그런 장관을 매도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이런 표현에 대해서 판결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죄 내면서 친일매국노 부분에서는 판결을 빠뜨렸어요, 그냥. 이 판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당사자들은 정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윤리학자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해야지 산과 물을 뒤바꿔서는 곤란하다’ 또 ‘산에도 물이 흐른다고 해서 물이라고 하든지 물에도 산의 모습이 비친다고 해서 산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이한성 의원** 귀에 걸어야 하는 것은 귀에 걸어야지 그것을 코에 걸면서 코에 어울린다고 강요를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지금 이런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정이 대충 어떤지 아십니까? 법정 한번 가 봤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가 본 적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오래됐습니다.

○**이한성 의원** 오래된 것 말고 최근에 가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최근에 못 가 봤습니다.

○**이한성 의원** 최근에 법정은 참 소란합니다.

시국사건, 불법시위사건 혹은 점거농성사건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같이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에는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수백 명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해서 재판을 뚫어지게 살펴보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은 야유를 하고, 검사는 아예 욕설하는 것이 보통이고 법관에 대해서도 야유, 소란 피우고 구호도 외치고 이런 것이, 요즘 법정의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모르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일부 법정에서 소란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한성 의원** 이런 법정에서 많은 판사, 법관들은 정의를 실현하고 법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기 위해서 정말 용기가 필요한 정도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경우에 판결 잘못됐다고 매도하고 공격하고, 정신없을 정도로 그런 법정 분위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대부분의 법관

들이 그래도 ‘법이 무엇인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용기를 많이 내고, 요즘은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이런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교조들의 시국선언 이런 것을 무죄 선고하는 법관들을 보면 어떤 공권력 기관이 법에 따라서 권력을 집행하는 것을 죄악으로 보고 그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어떤 의거로 보고 그 의거를 실행한 사람은 의사로 보는 그런 그릇된 시각마저 있습니다.

총리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법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법원에서 결정된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예,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사의 독단적인·독선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 경력법관제가 필요하다, 단순히 사법연수원의 성적만 좋다고 뽑을 것이 아니라 높은 법들을 쳐다보면서 자기도 재판을 당해 보고 억울한 일도 겪어 보고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해 본 경험을 가진 다음에 판사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역시 법원의 내부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한성 의원 그것은 법원조직법 문제이고, 지금 법무부에서 법원조직법은 개정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총리로서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다만 국회에서 지금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이한성 의원 법을 집행하는 총리로서 어떤 그런 사회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지 지금 국회에서 한나라당만 쳐다보는 것은 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로서도 행정 각 부를 통솔해서 바람직한 법 제정의 방향은 제시하고 같이 연구하

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지금 대법원에서는 사실 몇 년 전에는 16명 대법관이 있다가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사건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대법관 한 사람이 연간 2000건 정도 취급을 하고, 그것은 미국의 한 30배 분량 정도의 그런 엄청난 부담량입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지금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들도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법관만 그렇게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관들도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일하는 법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한성 의원 이념단체로서 현재 물의가 빚어지는 우리법연구회, 대법원에서는 지금 해체에 대해서 거듭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또 답변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법부 독립의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성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대법관에 외부인력도 좀 들어와서 대법관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다음은 조금 포인트를 벗어나서 국민 간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6·25 전쟁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건국선조들 참으로 현명하게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바람이 불 때였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건국선조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서 이만치 부강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초기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공산주의자들이 북한과 합쳐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자 이런 기도를

우리나라 남한에서 했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군과 경찰이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생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또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원 판결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한계가 있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진실 화해의 건의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2005년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간 희생자들의 진실 규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국방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렇지요, 그것이 벌써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분들은 억울하게 죽은 것도 억울한데 한 60년간 사실은 그 희생 사실조차 입에 담지 못하고, 외부에 발설도 못 하고 숨어 지내면서 어떤 공직 진출도 제한당하고 이런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한성 의원** 조속히 화해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감입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과 각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우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하고, 그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발부받고 또한 압수한 물건들을 조속히 반환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준다 이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서 대책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문희상 부의장, 이운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 이귀남**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포괄적인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2002년도부터 법무부에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서 포괄적인 압수수색

을 좀 금지하도록 했고 또 검찰에서도 2007년부터 수사 실무전범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포괄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영장을 포괄적으로 신청하면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인권친화적인 선진형 수사관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압수물 반환에 관해서도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보면 경영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압수물은 바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압수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꼭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압수할 때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법률 상담 또는 속사정 얘기 이런 것을 압수해서 물의가 빚어지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그것을 듣지를, 사례를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한성 의원** 장관께서는 과문하신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기업체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중수부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사건의 8배를 넘는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죄율이 높은데도, 중수부 검사들 무죄 나도 도대체 불이익 하나 받지 않는데 대책이 됩니까? 원인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말씀하신 대로 대검 중수부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무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사회지도층의 뇌물수수탈지 업무상 배임 등 입증이 좀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도 지난해 12월 23일 날 법무부 업무보고 시에 무죄 대책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법무부에서 사건처리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좀 높이고 무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법리 꿰 맞추기탈지 또 압박용 별건 과잉수사탈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해당자를 바로 인사조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무죄평정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대검 감찰부가 무죄평정을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보호 논리로 법원과의 견해 차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없어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래서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얼마 전에 대검 감찰부장을 제 방으로 오게 해서 그 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리고 국민 신뢰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확보됐으면 법정에 현출을 하고 또 피고인이 억울하게 됐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무슨 공소장 변경이라 할지 법정에 자료를 제공해 줘 가지고 피고인을 위한 공익활동도 좀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검사는 객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수집을 해서 법정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재정신청사건, 국민이 알기 어려울 텐데…… 고소했다가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죄가 된다 해 가지고 법정에 넘기면 그때 검사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어떻게 죄가 안 되는 것으로 무죄를 구형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가 객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무죄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정신청사건 중의 한 60% 정도는 유죄구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물론 그것이 자존심이나 감정적으로 무죄구형 하면 안 되고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재산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작해서 공소유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래서 현재 60% 정도를 유죄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야 말로 사회에 정

의가 세워지고 억울해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이 안심하고 자신의 경제 및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점점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있는 법원·검찰에 대한 제반 문제가 조속하게 말끔히 해소되어 국민 경제의 발전 속도가 배가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이한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한성 의원님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구인 경북 문경·예천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오셨는데 미리 소개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신 것 환영합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입니다.

총리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자, 녹색성장을 외쳐 온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환경성과지수에서 OECD 꼴찌, 평가 대상 163개국 94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아직 녹색성장 할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그것은 과거 자료에 입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자료에 입각한 것 아닙니까?

○**최영희 의원** 2006년도에 133개국 중에서 42위를 했었고요, 그 뒤로 지금 2009년도 이 부분에서는, 이것 과거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에서 2009년 19위로 추락했고 그리고 싱가포르·홍콩·대만에도 뒤졌습니다. 이것도 과거 자료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는 한 해 한 해 변하는 세계 랭킹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랭킹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2008년에 취임을 했는데 2009년에 과거의 자료를 보고서 랭킹을 매긴 것에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자, 그러면 GDP 규모는 2007년 OECD 13위였는데 2009년에는 15위로 추락했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IT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2009년에는 무려 16위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실은 좀 이런 통계지표를 보면 굉장히 엉망이 된 건데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GDP 규모가 13등에서 15등으로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요동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영희 의원 우리나라만 환율에 요동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3등에서 15등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환율의 영향이 많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작년 같은 때는 연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예측이 됐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는 굉장히 경기 회복을 잘하는 나라로 칭찬을 받은 일도 있고요, IT 랭킹에 대해서도 오전에 우리 최시중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랭킹을 매기는 기관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굉장히 좋은 랭킹이 나오고 어떤 것은 좋지 않은 랭킹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 평가한 것 중에서도 좋은 랭킹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최영희 의원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아이폰 문제 때문에도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IT 부분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 자신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내년도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사실 참여정부 내내 정부에서 경제지표가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나라당은 세계 경제상황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그것밖에 못 했느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사실 국격을 높이자는 이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과거 같으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도 비밀비재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밤에 야당의 항의 속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야당이 퇴장한 후에 마지막으로 통과된 안건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새벽에 한 것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의원 새벽 말고요. 새벽은 3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

○최영희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그것도 상임위와 법사위의 의결을 깡그리 무시한 채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다수당의 입맛대로 처리한 법입니다.

앞으로도 상임위 결정이 정부나 다수 여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상임위의 존재 의미를 무시해 버리는, 아주 무력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취임 초에 여성부를 왜 축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이 정부 취임 초에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의원 그렇지요. 여성부를 아주 손톱만큼 남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정부 초에 될 수 있으면 정부기구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하던 역할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부에도 역시 나누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면 왜 다시 키우려고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여성부가 지난 가을부터 조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영희 의원**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커진 겁니다. 왜 키우려고 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역시 여성 고유의 업무를 전문 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 갖고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어떤 부분을 여성부에다 옮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업무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그게 여성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청소년 업무야말로 여성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에 있던 아동과 보육은 왜 복지부에 남겨놓고 청소년만 옮겼습니까? 어느 것이 더 여성과 관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아동이나 보육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아동·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러나 그건 저 개인 의견이고 지금 정부 내에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정부에서 진지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부입법을 맡겼습니다, 여당 의원한테. 그래서 사실은 원칙도 방향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조차도 원칙도 철학도 없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수제비 뜯듯 합니다.

수제비 뜯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수제비 뜯다 보면 너무 작은 것이 나오면 조금 붙여서 다시 또 키워서 물속에다 집어넣지요?

총리께서는 복지부가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통합 3법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

○**최영희 의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009년 12월 말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위기를 넘어 미래로 2009년 국정운영 성과'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이 보고서에 보면 정부법안 제출 및 추진 현황에는 아동·청소년 통합 3법……

저기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이 '성과'라고 버젓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아동·청소년 통합 3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성과라고 하면서 바로 그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아동·청소년 정책을 분리했습니다. 그것도 정부 내에서 토론을 거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청부입법으로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1월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출산·보육 업무 당연히 여성부로 가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청소년은 여성과 관련 있고 아동과 보육은 여성과 관련이 없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정부는 개념이 없는 정부입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중복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그동안 아동·청소년 정책이 대상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달라서 지침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통합돼야 한다, 그래서 바로 복지부로 청소년 정책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다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분리시켰습니다.

총리께서는 상임위 의결대로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다시 통합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장담 못 합니다.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예, 여당 의원들도 제 의견이 맞다 그랬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함께 있어야 된다, 어느 부처에 가든지 함께 있어야 된다, 제 의견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을 제시한 의원 얘기가 '전재희

장관님께서 너무 힘이 세시니까 장관 그만두시고 나면 옮겨가자', 누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희 장관이 너무 활동을 잘 하십니다. 장관 직 정말 잘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으로 돌아오셔도 당의 중요한 간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총리를 하셔도 충분히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희 장관만 바라보신다면 이것은 통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통합을 안 시킨다면, 금번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 추진은 아동·청소년 정책을 다시 20세기로 후퇴시킬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조직 개편에 따른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리님, 그대로 잠깐 계십시오.

과학기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있습니까? 아, 마이크가 없군요.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님 잠깐 뵙고 그리고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장관님!

638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여되는 한국뇌연구원 설립 추진, 대전 인천 대구 등을 대상으로 현재 평가 작업 진행 중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영희 의원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체적으로는 2013년에 개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늦어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후보,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후보 풀을 만드는데 그 후보 풀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영희 의원 평가위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영희 의원 세종시와 관련된 정치적 고려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아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3조 5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공모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영희 의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3조 5000억 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영희 의원 왜 공모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무엇을 밟지 않는다고요?

○최영희 의원 공모절차!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공모절차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경우라고 합니다.

○최영희 의원 왜 다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공모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영희 의원 국책사업에서 공모절차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결정하면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그 장소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총리께서 오전에 '전국을 다 어떻게 조사하느냐,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 정도'라고 하셨던 것 들으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영희 의원 이미 교과부가 지난해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조사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영희 의원 몇 개 지자체가 접수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최영희 의원 129개 지자체가 접수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적합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예.

○최영희 의원 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전 지금 기억 못합니다.

○최영희 의원 천안입니다. 2위는 아산, 3위는 대구로 결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저희가 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릅니다.

○**최영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1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미 국토연구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등까지 결정됐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세종시가 좋다고 건의하신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그것은요 사전 입지 검토과정에서 천안이 1등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최종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그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한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야말로 사전……

○**최영희 의원** 그러면 사전조사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교과부장관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이면 그냥 결정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사전조사가 최종 결과는 아니다, 사전조사 과정에서 나온 그 순위가 최종 순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희 의원** 물론 다른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러면 결정하실 겁니까? 공모 절차를 거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위원회에서는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도시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건의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역시 세종시가 가장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사전조사 과정에서는 세종시가 이런이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모습을 떨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1등을 못 했지만 세종시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이른바 수정안의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는 결론을 국토연구원에서 내 갖고 그것이 세종시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에다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에 좀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최영희 의원** 세종시도 그중에 하나였습니까? 조사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까, 사전조사의?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몇 등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그러면 억지 춘향으로 그냥 끌어 들일 수도 있는 것이네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지금 세종시가 사전조사할 때는,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거의 허허벌판이고 그 후에 정부 부처가 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지만……

○**최영희 의원**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무총리 정운찬**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했던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예.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서……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객관적인 형식조차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 의결도 되기 전에 4대강 사업 착공을 해서 헌법 위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불법 지원 또 환경영향평가는 졸속, 예비타당성조사 불법 생략 등 불법·탈법으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시행령을 고쳐서 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강압 정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4대강 사업은 모두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KAIST나 입주 예정자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함께 가기 위해서 세종시로 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과학적인 그런 평가를 통해서 결정해서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결정이 안 되면 다 같이 안 가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적어도 4대 기업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 근거지를 세종시에 두지 않는다면 거기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첨단녹색산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몇 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세종시 전체로 해 갖고 세종

시가 완성되면 25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최영희 의원** 녹색산업 창출로 되는 일자리가 4만 8900명이라고 ‘세종시 발전 방안’ 1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 중에 4개 기업이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지를 보면요. 이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2만 2494개거든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난번에 이용섭 의원이 질문한 것에서 ‘더 이상 들어올 기업이 없다, 땅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4%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고용……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협력업체를 거기서 만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생기는 일자리하고 나중에 생기는 일자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일자리 그다음에 유발된 일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4만 9400개는 초기의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도 초기의 일자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자리가 없다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최영희 의원** 그렇지요.

총리께서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 어느 정도 땅이,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지 현황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금 현재로서는 원형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최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전주하고 나주에 두 개 이미,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한테 제공을 했었고 일반한테는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 만드는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 이런 데 원형지 개발을 하도록 여지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최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네요. 그렇지요?

이미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는

기업도시나 이런 데들만 주겠다고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리고……

○**최영희 의원**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원형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건 혁신도시건 지금 세종시 수정안을 낼 때와 마찬가지로 용도를 바꾸게 되면, 다시 말해서 도시에 산업단지를 더 많이 만들게 되면 보다 싼값으로 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최영희 의원** 기존의 수십 개의 기업도시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앞으로 만드는 도시에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지금 현지의 원형지 개발은 여지가……

○**최영희 의원** 원형지 개발, 글썄요……

○**국무총리 정운찬** 많지 않지만 지금 땅값을 싸게 제공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들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용도를 바꾸게 되면 15% 정도 땅을 싼값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영희 의원** 자, 다시 외국기업 SSF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혹시 그 후에 지경부나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난번에 답변을 못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에너지 등 이런데다가 투자할 목적으로 유럽에서 돈을 모아다가 투자를 하는……

○**최영희 의원** 투자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투자 실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오라고 안 했습니다마는 곧 이리 올 것입니다, 한국에, 그 회사가.

그래 가지고서 사실은 저쪽에서는 MOA를 맺고 싶어하는데 현재 법 개정이 잘 안 된 상태고 또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MOA를 맺기 힘들다마는 과거에 맺었던 MOU를 다시 좀 새로운 조건으로 바꾸거나 할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총리께서 국회에서나 또 홍보를 하면서 외국 기업이 이렇게 큰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는 굉장

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MOA를 체결할 것, MOU도 아니고 MOA를 체결할 것이라는 데 투자 실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셨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예,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최영희 의원 지경부도 모르고 행복청에서도 모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모릅니다. 알면 총리께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어야지요, 의원들이 바로 질문할 것 뻔히 아는데.

이 회사가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총리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좋은 기업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좋은 기업이고 진짜 투자 가능한 것이냐……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와서 어떤 협약을 맺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세종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작년 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을 갖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모양인데 세종시 원안대로 안 하면 기업들이나 대학들이나 안 오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교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인센티브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세종시 수정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인센티브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그래서 총리께서는 취임과 함께 평소 소신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취임 이전에는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미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초기부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8년 7월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세종시 원안에는 자족기능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서 국토해양

부하고 건설청이 1년 또는 그 이상 연구를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우리들이 다시 세련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영희 의원 수정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총리께서는 총리의 평소 소신으로서 수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수정안 세력이 총리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국민의 뜻에 반하고 또 정치 쟁점화된 세종시보다 실질적인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총리되기 전에 그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약속도 한 것이 없고 어떤 지지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최영희 의원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을 넘겨서 방송문화진흥회를 만든 취지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의원 상법에는 주주에게 방문진, 방송사 이사 선임권이 있지만 MBC는 노태우 정부 이후로 방문진이 사장의 인사권을 배제하고 직접 뽑은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최영희 의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최영희 의원 MBC는 경영진이 내부에 있고 특히 각 분야의 본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자율성·독립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역대 정부가 사장의 인사권을 존중한 것입니다.

왜 이명박 정부만 MBC 인사권에 개입하고 논란을 일으켜서 방송 장악 시도라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왜 이명박 정부가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촛불시위로부터, PD수첩 프로그램으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여러 갈

래로 변형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엄기영 사장의 진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방문진 이사회가 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최영희 의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잘했다고도 하기 어렵고 못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그것은 아마 복합적인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영희 의원**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직접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당연히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어제 그제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제가 방문진 이사장하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만나다든가 협의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말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알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국민이 모두 다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서서히 방송 장악에, 특히 MBC 장악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법률적 상식을 갖고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최영희 의원** 본안소송 전까지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집행을 정지한다, 그대로입니다.

○**최영희 의원** 당사자가 해임 이전의 지위와 함께 권한을 모두 회복한다는 뜻이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지요.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영희 의원** 해임처분……

그렇다면 과거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렇지요.

○**최영희 의원** 김정현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을 정지하라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요.

그러면 김정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지위

와 권한을 모두 회복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일응 그렇게 봐야 됩니다.

○**최영희 의원** 문화부에서 법무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한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지금 현재 문화부에서 하고 있는, 예술위원장에게 일부의 권한만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문화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의원** 법률적인 입장만 얘기하십시오.

○**법무부장관 이귀남** 하여튼 두 분이 같이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잘못된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런데 그 분도 적법하게 임명이 됐기 때문에……

○**최영희 의원** 적법하게 해고를 시키……

해고가 불법인데 다음에 임명했다고 다 적법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불법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직무집행……

○**최영희 의원** 권한을 그대로 주라고 그랬잖아요. 권한을 그대로 주라고 그랬으면 과거에 하던 일을 그대로 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런데 가처분이기 때문에, 아직 본안소송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최영희 의원** 그러면 왜 들여보냈습니까. 안 들여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가처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본안소송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최영희 의원** 가처분 상태인데…… 그러면 안 들여보내도 되는 건데 왜 들여보냈느냐고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가처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임시적인 지위지요.

○**최영희 의원** 임시 지위라고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임시적인 지위지요, 지금.

○**최영희 의원** 그러면 이 판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최영희 의원** 아니……

○**법무부장관 이귀남** 잘못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최영희 의원**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역사적으로 문명의 몰락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힘을 가진 자의 오만에서 비롯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토인비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능력만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일을 밀어붙이려다 실패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의 부질없는 오만을 휴브리스(Hubris)라고 했습니다.

토목건설회사 사장과 청계천 공사의 단편적인 경험만으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에 다름 아닌 4대강을 파헤치는 것과 국론 분열의 새로운 도화선이 된 세종시 수정안 추진 모두 대통령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개인의 오만은 개인의 실패로 귀결되지만 국가지도자의 부질없는 오만은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만과 독선에 휩싸여 휴브리스의 우를 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윤성** 최영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실 김세연 의원 소개로 지역구민이신 부산 금정구에서 100명에 가까운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실 김창수 의원님 소개로 지역구민 대전 대덕구에서 마흔 명에 가까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의석에 계신 분들보다 3배가 넘습니다.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정책들 중에서 위기 학생 구출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우리의 어문정책의 문제점과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올바른 방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는 2009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도시로 치면 과천시 인구에 해당하는 7만 명에 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金世淵 議員** 예,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안전통합시스템, 일명 Wee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위(We)하고 이모션(emotion)하고 에듀케이션(education) 따서 더블유(W) 이(e)이(e)로 해서 위(Wee)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예, 지난 2년간 시행된 Wee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Wee 클래스 설치 학교의 학업 중도 탈락률은 2분의 1로, 무단 결석률은 무려 3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본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시점인데 총리는 향후 추진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 Wee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를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법적 기반의 미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애로사항이라면 그 법적 기반…… 현재 반신반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Wee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Wee



센터 간 상이한 운용체제로 조직의 통일성과 또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고 또 Wee 센터 직원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예,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신분 보장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들을 포함할 법제화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2건 발의되어 있고 교과부에서도 관련된 훈령이나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통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법제화 논의 시에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인력 충원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원활한 상담활동을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1만 1080개의 초·중·고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현재 883명만 배치돼 있습니다. 그 중 300명은 순회를 하면서 상담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고정 배치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짐작하기에는 전문 상담교사 증원문제가 이른바 교사의 정원문제와 연결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예, 게다가 지난해에 전문 상담 인턴교사 1600명이 9월부터 4개월간 고용되었다가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나 모두 그만둔 상태입니다. 총리께서 이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예, 학생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원활한 상담활동이 가능할 것인데 이렇게 4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원활한 상담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당장 정규직으로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인턴 교사보다는 적어도 기간제 전문 상담교사의 채용과 또 이들의 Wee 센터 배치 등을 통한 좀 정상적인 안정적인 상담이 꼭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감입니다.

○**金世淵 議員** 두 번째로는 교사가 아닌 전문 인력의 학교근무를 가로막는 현재의 경직된 인사 제도에 관한 건입니다.

상담분야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 별도의 학

교 심리학자, 즉 학교 카운슬러가 심리 상담 및 시스템 개선 등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전문 인력이 교사라는 자격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도 동감입니다.

○**金世淵 議員** 예, 그러면 교과부장관에게 관련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검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金世淵 議員** 예, 세 번째로는 전문 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의 문제입니다.

Wee 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학 전공 석사 등 전문 인력의 연봉수준이 혹시 얼마인지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1년에 20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金世淵 議員** 미국의 경우에는 참고로 학교심리학자가 4만 5000불 정도 그리고 박사급은 5만 5000불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 관련 전문 인력이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기능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잦은 이직을 막고 학력, 경력, 전문성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무래도 그 처우와 보상이 적절치 않으면 낮은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예산 문제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Wee 프로젝트 예산이 전년 대비 60% 삭감되었고, 2010년도 예산안 856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75%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기의 학생들을 구출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Wee 프로젝트가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의 처우하고 임금이 더 향상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金世淵 議員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또 예산 배정은 매우 불규칙합니다.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Wee 프로젝트에 더 많은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일단 편입이 되면 계속성이라고 그럴까 연속성이 중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러면 학교 상담과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 배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특별교부금을 증대시키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고, 동시에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있는지도 정부 내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856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210억 원의 예산으로 예산안 당초 안과 달리 급격히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으로 줄 거냐—특별교부금으로 줄 거냐 아니면 또 일반회계로 편입할 것이냐—하는 것은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이런 점 때문에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수립 시에는 꼭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고 예산도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확실하게 이 사안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다음은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나라 현재 어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사회 현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추상적인 개념들이 더욱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점은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특히 의학, 철학 같은 전문용어의 95% 이상, 초등학교 국어책도 55%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즉 한국어의 70%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자를 하나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난 수십 년간 한자교육을 소홀히 해서 우리 문화 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문화 발전을 더 넘어가서 인격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자교육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감사합니다.

현 교육체제와는 정반대로 매년 85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한자능력인증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화로 된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는 13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시리즈물이 나올 때마다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주요 사교육 업체 다섯 곳의 한자 학습지 회원 수가 9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연 매출액 합계가 3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얼마 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7.3%, 학부모의 89.1%가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90.1%가 초등학교 한자교육에 찬성하였습니다.

결국 한자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도 높고 그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한 해에 3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정부가 학부모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한자교육을 바깥 교육에서 학교 교육으로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총리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신 데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순수한 한글을 뜻하는 '순 한글'이라는 단어조차 '순(純)'이라는 한자와 '한글'이라는 순 우리말이 결합되어서 형성이 되

었습니다. 한자가 우리 언어체계의 DNA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쪽짜리 어문 정책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총리께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자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어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일본 문화 개방에 그렇게 우리가 거부감을 가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으로 우리가 문화 상품들을 수출하고 있듯이 한자 사용과 관련해서 한글 전용만이 지고지선의 선이고 애국이고 한자 사용은 마치 죄악시되는 듯한 이러한 폐쇄적이고 쇄국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한자의 적극적인 수용, 허용 또 활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사고와 활동 영역이 더 폭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어문 정책의 성찰과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한자와 한글을 동시에 가르쳐서 우리의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 상상력이 창의성으로 연결되고 창의성이 다시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다 연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에 한자가 어떻게 지금 포함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전부 다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도 선택이고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도 아주 제한된 시간인 1.17시간 평균이 나오는데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이미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권 또는 경제권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곧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그러나 불행히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의 고려 현종 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도 체제가 완성된 것은 600여년 전 조선 태종 때입니다.

갑오개혁 당시에도 지방행정체제를 개혁한다고 8도에서 23부로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다시 도 체제로 환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도라는 지방행정체제가 1000년의 세월을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큰 산과 강을 경계로 잡는 등 최대한 그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고 또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역사가 도의 자연 발생적 특성에 기반한 생존력과 경쟁력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20세기가 국가경쟁력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 경쟁력의 시대라는 전제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각 국가 간의 경쟁이 도시 간의 경쟁으로 바뀔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金世淵 議員** 이런 지역 간 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도와 광역시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도는 중심 도시가 상실됨으로써 중핵 기능을 수행할 중심 도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을 뺀 충청남·북도 또 광주를 뺀 전남남·북도, 대구를 뺀 경상북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핵 도시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잘게 쪼개어진 광역시와 도의 경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사실 정부는 도와 광역시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른바 5+2 광역경제권을 구성해서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현 지방행정체제에서는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행정 통합이 되지 않고 경제 통합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어렵습니다.

○**金世淵 議員**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핵심 문제는 광역단체의 규모는 너무 작고 기초단체의 규모는 너무 큰 데 있습니다.

2008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총생산, 즉 GRDP 합계가 1658억 불입니다. 우리 전체 GDP의 17.8%를 차지합니다. 국가로 치면 헝가리와 뉴질랜드보다도 큼니다. 말레이시아와 칠레보

다 조금 작은 편입니다.

지금의 광역단체들을 역사와 문화와 또 경제·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통합한다면 세계무대에서 지역 간 경쟁을 제대로 펼쳐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지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결정해 주시면 행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개편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주요국들이 1000만 명 안팎의 광역 지방정부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도를 분할해서 육칠십 개의 도토리 키 재기 식의 기초단체를 양산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1993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5년간에 걸쳐 초광역화를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현재 우리의 행정구역은 16개 광역시·도로 구성되어 있고, 광역단체 인구는 평균 304만 명, GRDP는 평균 580억 불입니다. 그런데 70개 통합 시로 재편되고 나면 인구는 평균 69만 명, GRDP는 평균 133억 불로 축소됩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현재 47개 도·도·부·현의 평균 인구는 272만 명, 평균 GRDP는 1045억 불입니다. 만약 11개의 도와 주로 재편된다면 인구는 1161만 명, GRDP는 4463억 불이 됩니다. 일본 11개의 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총 GDP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한국의 지자체는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너무 작게 되고, 왜소화되고, 일본의 지자체는 초광역화를 통해 그 경쟁력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議員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별시의 자치구 통합 문제는 자치구 간의 자율적인 논의에 맡겨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역시의 자치구 문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논의해야 합니다.

광역행정을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국가 기능 중에 분권에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은 도로 이양해야 합니다.

시군의 무리한 통합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자율 통합 외에도 자율 분리, 자율 설치 및 폐지 모두를 가능케 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통합에 대한 무리한 인센티브의 부여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왜곡해서 무리한 통합을 유도할 우려가 있고 통합된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역차별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인구 규모 70만 명인 도시와 통합으로 70만 명이 되는 도시가 있다면 유독 후자에 대해서만 재정특례, 행정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 대우에 해당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은 통합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해서 경계 조정을 하고 분할을 하고 신설을 한 곳, 모두 필요합니다. 통합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과 인센티브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공정합니다.

총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안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김 의원께서 하도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다 소화는 못 했습니다만 정부로 돌아가서 행안부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예,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꼭 잘 살펴 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국가의 운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중차대한 사안이 일부 중앙관료와 그 이해관계자의 편익에 맞게 재단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 수요자이자 최종 주권자인 국민, 이 국민들이 모두 지방의 주민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주민입니다. 이제 막 뿌리내

리고 있는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것을 방지해서도 안 되고 세계적인 지방분권으로의 흐름에 역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빈국이었을 때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가 절실하였고 또 많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만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인구 5000만 규모의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허약한 국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가 좁다고 해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자치의 권리, 지방분권까지 좁아져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집중, 집권의 시대에서 분산,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현장성, 역동성이 살아 숨쉬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로써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완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세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5시부터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교과부장관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상임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교섭단체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교과부장관이 상임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대신 교과부1차관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그리고 불과 16일 만에 있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전면 백지화를 기도한 정부의 입법예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이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운찬 총리와 현 내각, 그리고 청와대와 총리실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고위공무

원의 충성경쟁이 빚어낸 합작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500만 충청인과 국민의 여망과 분노를 대신하여 바로 그날, 수정안 발표가 있던 날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의원 분과 함께 국회 앞마당에서 삭발을 결행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는 많으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주에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 다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총리, 대통령께서 말한 강도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잘 이해를 못 하신다?

뭘, 최근에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정외 논란을 빚는 사안을 두고서 비유법을 써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 둔한 머리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든 물론 강도가 들어오면 싸우다가도 가족끼리 맞서 싸워야지요. 하지만 가족 중의 누가, 식구 중의 누가 강도를 불러들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제가 어제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그 뜻을 완전히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자,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또 어저께 충북을 가셔서 오창과 오송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하고 청주공항 활성화, 청주-천안 간 전철 연결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집권당에게 유리한 그런 선심성 발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 아닐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제 대통령께서 충북에 도정보고를 받으러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도정보고를 듣는 것과 선거를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아, 여기가 특히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그 시점과 그 장소가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그건 사실은 제가 훨씬 전에 청주를 방문했을 때도 충북도민들한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청주공항 확장을 검토하겠다 또는 천안하고 연결되는 철도도 검토하겠다, 단지 자유경제구역 문제는 현재 있는 것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한 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보면 선거일, 투표일로부터 120일 전 또 180일 전 또 90일 전, 이런 그 시기적으로 공직자라 하더라도 해야 될 발언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참석해야 될 곳이 있고 안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과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철저히 감독해서 선거를 치러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을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대통령의 방문은 일상적인 도정보고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의원 그 자리에서 또 대통령께서는 좀 알맞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하는 사람을 밀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싸움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세계하고 경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떤 후계자에 관련된 이런 발언을 또 그렇게 유추될 수 있는, 그런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또 박형준 수석이 라디오에서 말씀한 걸 보니까

그것은 딴 뜻이 아니라 충북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요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황산벌’?

○김창수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창수 의원 ‘왕의 남자’를 만들었던 이준익 감독이 만든 영화죠. 2003년도에 상영된 건데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보고서 상당히 좀 인상에 남아서 이 자리에서 좀 인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황산벌 전투는 삼국시대에 신라하고 백제가 맞붙었던 최후의 결전을 치렀던 그런 곳이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창수 의원 거기에서 계백이 5000 결사대를 이끌고서 황산벌로 가기 전에 자기 처자를 다 죽이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창수 의원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그의 처가, 이걸 영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창수 의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을 좀 패러디한 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씀을 아시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창수 의원 그런데 이 처자가 내뱉은 말이 “호랑이는 가죽 땀시 죽고 사람은 이름 땀시 죽어, 이 인간아” 하면서 계백 자기 남편을 일갈하면서 그 칼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세종시 논란을 보면서 이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세종시 역시 이름 때문에 지금 그 의붓자식 취급을 받고 있고 태어나는가 했더니 사산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지도자의 오만과 그리고 자기의 앞서 있었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다시 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글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한 6, 7년 전부터 세종시에 대한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

서 무엇이 충청도를 위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원안으로는 그 지역 분들도 잘되기가 힘들고 나라 전체로도 잘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 세종시 문제를 지난 9월 초에 발제했던 것이고 발제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 의원** 총리, 저는 지금 세종시 문제를 발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걸 믿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총리께서 발제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총리는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앵무새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비전과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한 것이 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강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는 일생을 양심껏 살아왔습니다. 거짓말은 안 합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우연히 일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월 3일 지명을 받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물어보길래 제 평소의 생각을 그냥 말씀을 뿐입니다. 절대 그 총리……

**○김창수 의원** 자, 그러면 총리께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되면 거덜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세종시가 원안대로 해서 9부 2처 2청이 옮겨지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덜 난다고 언제부터 생각하십니까?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오래 됐습……

**○김창수 의원** 서울대총장 때부터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김창수 의원** 아, 서울대총장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김창수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사회의 어떤 비판적 지성인으로서 많은 글도 기고하셨고 또 때로는 특강도 하시고 방송에 출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거덜 날 일을 그때부터 인지하셨다면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리가 합당한 얘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저는 2004년에 어떤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부분적으로 세종시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학자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인데 그 글은 정말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공……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나라가 거덜 나고 그리고 원안은 정말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고 그런 진지한 인식이 있었다면 그때 그러한 글을 쓸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에 공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일은 마땅히 발언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걸 중단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총리 이전에 대학 총장이자 지성인으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경제학자고 경제학 중에서도 화폐금융하고 거시경제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글을 100% 자신 없을 때는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글 쓰는 것을 삼갔을 뿐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나라가 거덜 난다는 것은 100% 자신이 아니고 한 10%, 20% 자신 갖고 하는 얘기였습니까?

나라가 거덜 난다는 것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소신에 비추어봤을 때 100%가 아니라 150%, 200% 확신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 여러 글을 쓰는 것을 저는 죽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제 전공이 아니라 말을 삼갔다 그 말씀이고요. 총리가 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창수 의원** 그런 건강부회는 그만하십시오.

총리는 ‘세종시 원안은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복선을 깔고 한 것이다.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안타깝다. 일부 정치인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총리의 정확한 워딩을 따서

지금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첨삭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내용은 마찬가지로입니다.

○김창수 의원 내용은 마찬가지로는 게 뭐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혹시 제가 정치적 용어에 미숙해서 좀 거칠게 들리는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 내용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 동료 의원들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언론을 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것이 구결행위입니까, 아니면 악입니까, 범죄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구결이라고 생각도 안하고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자, 김창수라는 여기 단상에서 있는 사람이 표 없이 선거에서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는 것을 떠나서 이 세종시안이……

○김창수 의원 총리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는 행위를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보고 그것을 사악시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니에요? 총리의 정치관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종시……

○김창수 의원 과연 총리께서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창수 의원 정치인이 당연히 유권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가겠다, 나라의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또 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표를 얻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재선·삼선하고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리가 만든 세종시안이 우리가 보기도 참 좋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은 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분들은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정

치인 여러분들의……

(○류근찬 의원 의석에서 — 거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한 말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 그 지역주민들, 지난번에 총리 공관에 연기 주민들 다섯 분을 초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총리 공관에 초대한 일은 없습니다. 총리실에 온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했다기보다는 오시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만찬을 같이한 것은 아니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만찬을 같이한 것.

○김창수 의원 재보상대책주민위원회 다섯 명을 초청해서 저녁을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닙니다. 총리실에서 낮에 만났습니다.

○김창수 의원 총리실에서 낮에 만났다.

○국무총리 정운찬 총리실의 면접실에서 만났습니다.

○김창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연기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런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리 입맛대로 귀에 아주 달디단 얘기만 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날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김창수 의원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총리께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 분할이라는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총리실과 9부 2처 2청이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창수 의원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에서 나온 것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 기능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명수 의원이 ‘현재가 판결한 그것을 인정해야지요.’ 그러니까 총리께서 ‘현재가 수도 분할이 아니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수도 기능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답변……

○김창수 의원 맞는 얘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현재 판결문을 제가 보여드리지요.

현재 판결문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 11월 24일 날 현재 판결문 전문 중에서 제가 그 대목만 발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딱 돼 있지요?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지요? 아주 명문화돼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도 분할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애석하게도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총리가 헌법재판소 위에 있습니까? 헌법 위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더 많은데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최고 헌법 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총리를 상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우리 충청도 말로 ‘됐시유!’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 위기,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책임은 오직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기획재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와 있는 가나 재정기획부 차관 일행 8명이 와 계십니다.

지금 질문을 하실 진성호 의원 소개로 서울 중랑구울의 지역구민 서른일곱 분도 와 계십니다.

진성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애하는 정운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애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나날이 발전하는 미래의 서울 동북부의 중심 중랑을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께서 단식을 마치면서 제 방으로 천안 호두과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양 의원님, 건강 잘 챙기십시오.

저는 원안을 고수하려는 양 의원님이나 선진당 의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약속과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익을 위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전안을 마련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그리고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뜻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안은 껌데기라고 단정한다든지 원안 외에는 토론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원안이나, 아니면 수정안이나 이 문제는 좀 쿨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유지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어떤 입장을 주장했든간에 그 결론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수정안이 충청 발전을 위해서나 국익을 위해서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나의 주장만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어젯밤 늦게까지 의원실에 남아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부 인사나 선배·동료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행법으로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령 문화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성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판결을 봐도 6개 부처는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처는 행안부장관이 기안하고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이전이 가능합니다. 과천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총리, 세종시 원안대로 할 경우에 반드시 9개 부처를 다 세종시로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까? 법적 해석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법적으로는 일부만 가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 과천청사가 문을 열던 80년대 초반만 해도 자가 운전자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천과 서울 간의 교통 정체가 심각합니다. 장관 차관 등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효율을 겪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진성호 의원 그렇다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런던이나 워싱턴 D.C., 동경, 파리처럼 우리도 반경 1~3km 이내에 정부 부처가 집중 배치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사실 바람직하기는 다시 모이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진성호 의원 그런 의미에서 현재 과천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나 법무부나 지식경제부나 노동부나 국토해양부 같은 것들이 다시 서울로 온다면 좀 더 우리 정부가 경쟁력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게 믿습니다.

○진성호 의원 자, 총리, 그러면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을 하게 되면 과천청사는 비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정부나 지금의 정부가 비게 될 과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진성호 의원 저는 서울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번 세종시 관련 논의를 보면서 모든 것은 충청 발전에 초점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세종시가 7년 전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 지역 사람들은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온다고 하다가 반만 온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하나도 안 온다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특히……

○진성호 의원 세종시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당연합니다.

○진성호 의원 서울대 총장을 하셨는데요, 만약 과천청사가 비게 되면—세종시로 가서 비게 되면—그곳에 서울대 일부가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실현 가능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학 교수들이 한때 우리가 현재 위치에 있는 것보다 과천에 갔으면 더 좋았을 거다 말하면서 만약에 거기가 비면 서울대학이 좀 일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말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성호 의원 총리, 2008년 기준으로 지역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의 1위가 울산이고 2위가 충남입니다. 제가 보기에 충남은 그래도 국토 균형발전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꼴찌가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혹시?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요, 전남입니까?

○진성호 의원 대구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대구입니까?

○진성호 의원 시도별 평균 급여 꼴찌도 대구입니다.

저는 지역 균형발전에 이번에 세종시 블랙홀

이론이 나왔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구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데 이 지역이 더 점수가 높을지는 모르지만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더 다른 정책적 배려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무감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사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첨단의료단지도 앞으로 설치할 것으로 했고 또 국가산업단지도 거기 들어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성호 의원** 제가 문방위 위원인데요, 같은 스포츠…… 예컨대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다른 지역의 다른 스포츠대회에 대한 지원과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진성호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진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정안 플러스알파 안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한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충청 발전을 위해서 우선 수정안을 통과시킵시다.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5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과천청사의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는 다시 서울로 옮깁시다. 과천에는 서울대학교의 자연대,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약대와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 27개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과천을 첨단 과학기술교육도시로 새로 디자인합니다.

(이운성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우선 국토 균형 개발이나 충청 발전을 위해서 수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안이나 원안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분들도 원안에 만약 수정안의 각종 인센티브가

더해진다면 충청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데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걸맞게 교육과학기술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서울보다는 영남이나 호남·충청과 더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부도 보냅니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를 이전시킵시다. 그러면 3개의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이 방안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내놓은 충남지역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옮겨 과학기술수도를 만들자는 제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안입니다. 만약 3개의 부처를 옮기는 데 대해서 충청인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부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3개 부처 정도만 옮기고 일단락 지었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하자고 제안합니다.

서울로 이들 부처를 집중 배치해서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돕고 앞으로 국제 경제 전쟁에서 더 긴밀하게 부처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는 서초동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직 국민을 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충청도민에게 애국심을 호소합니다. 이 방법들은 총리도 답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청사가 떠나가는 과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지호 의원께서 현대리서치에 의뢰해서 600명의 과천시민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이 전화 여론조사에서 69%가 세종시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 과학기술연구소의 입주를 선호했습니다.

과천 시민들에 대해서 거주 만족도를 물었더니 놀랍게도 94.3%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만족 이유에 68.1%는 녹지공간 조성이라 답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댈 분들은 단지 4.1%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세종시의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과천을 첨단교육과학기술도시로 바꾸자, 서울대학교의 자연대,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그리고 약대, 그리고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27개의 연구소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과천에 서울대의 일부 캠퍼스를 이전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안과 수정안이 모두 거부될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대로의 세종시 추진을 임기 중에 보류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국익을 위해서 본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당선된 분이 취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결말짓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종시 블랙홀 현상에서 나타난 국토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아까 대구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논쟁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민들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계획들이 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착시현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구·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통일까지도 내다보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도 지역도 저는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아쉬운 점은 서울·수도권 주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국민의 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민심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갈 경우 2000만 국민들이 겪을 불편도 정부는 감안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서울에 지역구를 둔 많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태어난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제게 고향입니다. 제2의 고향입니다. 대학 입학하면서 서울로 와서 기숙사, 하숙, 자취 해 봤습니다. 신혼 때 처음 전세를 마련하고 맞벌이해서

30평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다른 보통 서울 시민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꿈을 찾아서 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오늘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서울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 정보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토 균형발전은 서울 시민의, 경기도민의 고통과 불이익을 밟고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 큰 메리트를 줘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북도를 방문해서 했던 말들을 한번 새겨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제에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이냐 경기도지사냐 후보로 출마할 분들에게는 세종시에 대한, 사실상 수도 분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도 권고합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 씨나 한명숙 씨와 같이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 분할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견해를 과거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선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습니까, 강남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폈습니까? 정답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강남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값은 세 배 이상 올랐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분당·용인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행해도 정책 수단을 잘못 쓰면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전 정권과 전 대통령, 한나라당의 과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도 미래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선배 의원들로부터 들으면서 저는 박 전 대표의 고뇌를 어렵잖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한나라당 리더로서 당을 살리기 위한 그 선택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대신 저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세종시 문제를 온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론과 설득,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우리 국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진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김상희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못 봤습니다.

○**김상희 의원** 아직 못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지금 고용률이 56.6%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용률이요.

○**김상희 의원** 실업자 수가 121만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89만이 아니고 121만 됐습니까?

○**김상희 의원** 예, 121만입니다.

심각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총리께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 일자리 성적표가 2년간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평상시 같으면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지만 이미 재작년 말부터 금융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작년에 추경예산도 편성했고 또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고용 위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용률도 낮고 또 실업자도 많습지만 금년에도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한 고용회복프로그램과 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확충해 나가는 시책을 잘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래서 몇 점 주실 수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상희 의원** 세종시 때문에 별로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세종시 말고도 다른 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일을 놓고서 어떻게 A냐, B냐, C냐 하겠습니까?

○**김상희 의원** 지금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고용 없는 성장을 아주 혹독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드시피 고용률 56.6%입니다. 3.2% 하락입니다. 이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것입니다, 고용률로 치면.

일자리 7만 개 감소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실업자 4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자 30만 명입니다.

지금 일자리 수가 줄어든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뿌리 뽑혀 있습니다.

총리, ‘프리터(Freeter)’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뭐지요? 뭘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프리터.

○**국무총리 정운찬** 자유롭게 직업 없이 사는 사람……

○**김상희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

○**김상희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일자리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김상희 의원** 예, 일자리가 없는 것은 실업자고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프리터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김상희 의원** 정말 실망입니다.

지난해에 540만 명입니다. 2008년보다 50만 명 늘었습니다.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좀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구의 1%인 10만 8000명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수준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비정규직이 지금 한 팔구백만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렇지요?

임금 수준은요? 절반에도 못 미치지요, 1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1.8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기억이 안 납니다.

○**김상희 의원** 210만 명입니다. 저임금에 고통받으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는 세종시로 9개 부처가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뿌리 뽑혀진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라 거덜 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용사정이 나쁜 것은 우리 탓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세계경제 상황에 영향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상희 의원** 세계경제 탓만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그게 굉장히 큰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 한국의 산업구조가 주로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같은 것은 너무 자본집약적이고 또 수출이 많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김상희 의원** 그런데 아까는 ‘그래도 잘 대처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김상희 의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입니까?

그리고 총리께서는, 적어도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한 게 아닙니다. 아주

쿵직쿵직한 서민들의 삶의 지표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 고용, 국민들의 삶의 모습, 아주 기본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리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두 가지, 경제에서는 하나는 단기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단기에서 실업률을 0.1%, 0.5% 낮추고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취임 이후에 이 심각한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신 게 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들으니까 여덟 번 세종시 다녀왔더군요?

○**국무총리 정운찬** 주말에 갔다왔습니다, 주로.

○**김상희 의원** 예, 여덟 번 다녀오고.

그런데 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정부에서……

○**김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관심 가지시고 한번 뭐 챙기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총리로서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경제, 그리고 좁게는 고용을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세종시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하겠습니까?

○**김상희 의원** 지금 그렇게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사태의 어려움을 제가 경제학자로서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면 됐지 그 이상 뭘 생각하십니까?

○**김상희 의원** 지금 열심히 일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정도면 상당히……

○김상희 의원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번 외국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김상희 의원 그러면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이 뭐였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통해 갖고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희망근로사업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대학생 인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의 경제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 사람들 일하는 데 총리로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상희 의원 지금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세계 금융위기의 타트로만 돌립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김 의원님,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김상희 의원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작년에 플러스 성장한 나라는 한국하고 폴란드하고 호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G20 국가 중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세계경제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나마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질책만 하지 마시고 후한 점수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올리는 겁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께서 지금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감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 토목건설 임시 일자리 위주의 재정 투자, 노동시장 유연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재벌 대기업 일자리 창출 투자 결과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는 지금 자본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서 금

방 고쳐지는……

○김상희 의원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 주었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

○김상희 의원 10대 그룹이 늘린 일자리, 2400개입니다. 3/4분기 기업 설비투자 실적, -15.5%였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도 일자리도 만들지 않고 투자 안 했습니다.

토목건설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만 기업들은 이제는 70년대, 80년대처럼 ‘투자해라, 고용해라’ 해서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투자하고 또 고용을 많이 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무슨 특혜를 줬다는데 기업들한테 어떤 특혜를 줬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상희 의원 감세와 규제 완화 다 해 줬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규제 완화나 감세는……

○김상희 의원 지금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대기업들한테만 해 준 것이 아니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거시경제정책입니다. 지금 특혜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미시적으로 어떤 기업한테 특별히 해 준 것이 특혜이지 경제 전체……

저도 감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감세를 해서라도 투자를 유도하려고 했겠습니까?

○김상희 의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처럼 기업이 투자하란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이 추세이지 않습니까?

청년 인턴제 얘기하셨습니다.

청년 인턴제 성공한 정책입니까? 지금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몇 명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2.6%입니다.

기업의 인턴사원 3배 증가했습니다.

결과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 기피하고 비정규직 확대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 유연성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안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고용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김상희 의원** 총리, 제대로 알고 대답하세요.

OECD 28개국 중에서 12위입니다, 고용 유연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부는 고용 유연화에만 매달려서 지금 비정규직 확대, 사내 하청 증가, 이로 인한 고용 양극화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잡 세어링 효과, 결과 어땠습니까?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 나누겠다고 했지요? 오히려 지금 상장기업 942개사 조사를 하니까 158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일자리는 낙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미래 일자리 대책 내놨지요?

고용전략회의 개최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해서 인정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현실이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그리고 고용전략회의에서도 이걸 다 인정하면서도 정책 기조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김상희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1월 21일에 열렸습니다. 거기서 일자리 대책에 국정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한편으로는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 회복을 위한 단기적 고용 안정 프로그램과 함께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고용 등 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기적 고용 안정대책은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것, 두 번째는 계층별 고용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세 번째는 빈 일자리 취업 시 취업장려수당을 준다는 것, 네 번째는 고용 증대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 원씩 세액을 공제한다든지 지금 100% 만족하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노동부가 고용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고용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만료가 돼 있는데 이것을 1년이나 방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고용 위기……

○**김상희 의원** 고용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렇게 1년씩 방치해도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경제가 너무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고용전망 예측이 어려워져서 잠시 중단했던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 아예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그래서 집권 3년차에 이르러서 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미 시행 중인 것들을 다시 끌어모아서 급조한 것입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마찬가지로입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서 지금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혀 새로운 정책?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봐 주십시오.

고용의 날 지정하고 우수 지자체에 교부금 확대하고 고용정책 제안 포상제 실시하고, 저 3개 대책으로 효과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웃습니다.

또 다른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효과 있는 정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효과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고요? 2010 정책 중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글썽 제가 여기 다 써 오지는 않았습니까만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그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내세울 만하다 하는 정책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작년에 좋은 정책을 저는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께서 지금 고용정책을 하나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학자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뭐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김상희 의원** 지금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뭐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들보고 고용을 해 주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노동시장에……

○**김상희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무슨 제도 얘기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고용 안정대책……

○**김상희 의원**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 말씀하십니까?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이미 참여정부 때 시행하고 용도 폐기됐던 정책입니다. 이것을 다시 도입하면서 증가 고용인원을 정규직으로 하지도 않고 비정규직까지 지금 확대했습니다. 이것 용도 폐기됐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세금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일자리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상당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제가 묻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총리보고 어떻게 모든 숫자를 다 대라고 하십니까?

○**김상희 의원** 고용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일자리 문제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일자리 정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대표적인 정책 하나도 폐고 있지 못합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무슨 말씀 하십니까?

○**김상희 의원** 오니토 발견되고 침수 위협 그리고 멸종위기 식물들이 포크레인에 밀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삽 뜨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오니토 문제는 아무런, 오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침수 문제는 또 역시 보의 높이를 낮추어 가지고서, 위낙은 한 17km<sup>2</sup>의 침수 우려가 있었으나 그것도 4.5 km<sup>2</sup>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철새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아주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상희 의원** 총리, 지금 하나도 과약을 못 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지금 4대강 환경영향평가 며칠 걸린 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그 4대강의 환경영향평가도 그냥 마지막 페이스만 보신다면 짧은 시간 내에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축적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만 보면 얼마 안 걸렸을지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연구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상희 의원**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데 환경영향평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김상희 의원** 대개 1년 넘게 걸립니다.

지금 22조 원 드는 4대강 사업입니다. 그리고 4대강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줄입니다. 이 사업하는 데 환경영향평가 40일 걸렸습니다. 실시설계도 없이 기본설계만으로 날림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달성보에서 얼마가 나왔다, 함안보에서 뭐가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근본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 지적인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장관한테도 물어보고 권위 있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면 문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퇴적토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강에 쌓인 퇴적토 말씀하십니까? 저는 우리 환경부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그러니까 환경부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2~3m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퇴적토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하고 있다고요.

○**김상희 의원**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상희 의원**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그것을 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 그전 것도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물론 했고 지금도 퇴적토 조사는 물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분이 질문하시고 다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김상희 의원** 총리님, 정말 걱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퇴적토에 대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 습니다. 총리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거짓말 하셨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거짓말 해명자료 올려놓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퇴적토의 제일 위층만 했습니다. 퇴적토가 있으면 2~3m 층층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고 했습니다.

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 피해도 지금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습니다. 함안보만 문제가 아니라 금강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모든 보에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정보와 달성보의 경우에는 주변에 성서공단이 있고 그리고 대구지하철 2호선, 강정 지역에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요, 저는……

○**김상희 의원** 이래도 계속 공사 진행하실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지금 하자 없이 기초공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침수 피해 조사 안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국무총리 정운찬**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부에 가서 한번 진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된 것 확인하시면 공사 중단하셔가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말씀이 사실인지를 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까지도 체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환경부에도 체크하고 환경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두 다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상희 의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하나같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공사 중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사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기 때문에 찬성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근거가 뭡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우선 갑문도 없고 터미널도 없고 또 그보다 저는 그 공약을 했다가도,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번이나 운하 안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건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뽑으신 대통령입니다.

○**김상희 의원** 대통령을 믿어서 그러신 거지요? 그리고 갑문과 터미널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이 시지요?

좀 보시지요. 사진을, 띄워 놓은 걸……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도 제가 전문가에게 다 물어봐서, 저의 기술지식은 없지만 다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좀 봐 주십시오. 이쪽을 봐 주십시오.

저것은 지금 독일 라인강 본류에 있는 이페츠하임(Iffezheim)보 사진입니다.

보와 어도 그리고 소수력발전소 그 옆에 배가 지나다니는 갑문이 있습니다. 유럽은 다 저렇습니다.

우리나라 보를 봐 주십시오.

우리나라 보, 밑에 합천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육안으로 봐서 유사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상희 의원** 이쪽의 고수부지에, 고수부지가 넓게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를 간단하게 설계 변경만 하면 화물선 2대가 넉넉히 다닐 수 있는 갑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걸 보시고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지금 무리하게 수심을 6m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저렇게 돼 있는데 저러고도 운하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의원 총리께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죽이기 사업입니다. 총리께서도 이 시기에, 이 기가 막힌 시기에 총리를 하십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말씀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뭘 삼가요!」 하는 의원 있음)

○김상희 의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의장 김형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1년 동안 외신과 외국 기관의 한국 경제에 관한 평가는 ‘금융위기로 위기감이 고조됐던 한국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서 1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공통된 논조입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Le Figaro)지는 지난해 11월 ‘한국, 기적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2월 2일 아시아판 표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실고 한국의 경기회복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오히려 경제 위기감을 조성하고 우리 정부의 성과를 깎아 내는 데만 급급하고 있

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히려 국내에서의 평가가 더 인색한 지금 만약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했던 사항들을 사사건건 반대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만 먼저 질문을 받기 전에 해명성 발언을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장님? 아침에 한 말씀을 하나 고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선 의원 일단 제 시간이니까 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아침에 손숙미 의원이 질문한 “아바타를 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바타를 봤다. 집에서 봤다.”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이렇게 좀 고치고 싶습니다. ‘집에서 신작 영화 등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바타에 대해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으나 뒷부분의 답변을 미처 마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집에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선 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상담·치료를 하던 아이에게 ‘인터넷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그림입니다.

아이가 친구의 목을 자르는 그림입니다. 심지어 잘린 친구의 목을 들고 웃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끔찍합니다.

○이정선 의원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자가 마약 중독자와 유사한 뇌신경학적 메커니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 의원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따르면 2005년 2만 9000명에 불과하던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2009년에 무려 11배가 증가한 33만 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청소년 중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정선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그래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정선 의원** 그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아이들에 대한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의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지원센터 등의 재원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업자나 포털 등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폐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기금 조성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일종의 규제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정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발전기금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은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업계의 자율적 추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선 의원** 총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관심을 두고 보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다음은 장애인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본 의원이 5년간 장애인 생활시설 내의 만 18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과 동일 연령의 아동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 시설 내의 아동 사망률이 무려 28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결과, 일부 시설에서 폭력과 감금, 성희롱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9년도 본인이 직접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갔을 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애인 수당뿐만이 아니라—이것은 물론 횡령을 하고 있었고요—폭행과 임신, 낙태 등 인권 유린의 사각 지대가 바로 장애인 시설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잠깐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시설의 식사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급식하고 남은 잔반을 걷어다가 지금 플라스틱통에 섞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아이티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현장의 실태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마음이 너무 아쁩니다.

○**이정선 의원** 마음 아픈 수준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고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우선권 실현 등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이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활동 보조 서비스 대상자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에서 가정형 시설을 늘려가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자립정착금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꼭 약속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정선 의원** 다음은 세종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는 세종시 주민들은 수정안에 대해서 점차 이해를 해 주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문제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총리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찬성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덟 번에 걸쳐서 세종시 현지를 방문했고 연기군 이장단 간담회, 이른바 예정지역 마을 주민 간담회 등 많은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발전안이 나오기 전에는, 1월 11일 이전에는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던 분위기였습니다만 정부의 발전안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점차 발전안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일부 마을의 이장들은 총리실을

방문해서 발전안이 국가와 충청도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주민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 지원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한테 주거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라는 등의 말씀입니다.

**○이정선 의원** 그렇다면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경제적 편익 분석자료를 보면 경제적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정안이 원안보다 훨씬 높습니다, 3배 가까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인구 유발 효과도 원안에 비해서 수정안이 3배가 높았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허락하신다면 제가 준비해 온 문건이 있으니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발전안이 원안보다 과급효과가 높은 것은 2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실질적으로 인구 50만의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 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 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들어서야 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이정선 의원** 예,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원안에는 일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전체의 6.7%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3배로 늘려서 충분히 공급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땅만 늘린다고 기업이 오지는 않습니다. 기업을 모셔 오기 위해서는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되고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값은 비싸고 세제 혜택은 전혀 없던 원안과는 달리 발전안에서는 기업·대학용 땅값을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고 신규 창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주기로 해서 그 결과 기업 유치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의 일자리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식당 등에서 유발되는 일자리를 모두 합하면 약 2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1만여 명의 공무원 이전 외에는 별다

른 자족용지가 없어서 최대 8만 4000개 정도밖에 일자리를 만들 수 없던 원안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안은 50만 인구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했지만 최대 유입 가능 인구는 17만이고 실제 유입 인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만을 넘기기가 힘든 데 비해서 발전안은 실제로 50만 인구를 달성할 수 있어서 인구 유발 측면에서도 높은 과급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편익에서 원안은 중앙부처 분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국정 비효율로 인해서 편익 합계가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만 충분한 자족기능을 확보한 발전안은 기업·대학 등의 생산·연구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편익은 평균 10배, 지역발전 효과는 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세종시 발전안 조그마한 책자를 보셨으면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보조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의원께서도 저하고 동의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정선 의원** 그러면 원안에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깊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완전히 선언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안을 만드는데 총괄 기획을 했던, 여기서 설명을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 공대의 안건혁 교수가 작년 11월 말에 어떤 일간신문에 쓴 것을 보면 원안은 정말로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구체성이 없었다 하는 것을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선 의원** 수정안은 총리의 양심을 걸고 정말 충청도민에게 행복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저의 양심을 걸고 현재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정선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이정선 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과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인터넷에 관한 아이의 그림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봤습니다.

○이정선 의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요즘 아무래도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하고 또는 가정환경이나 교육환경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많이 심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인터넷, 특히 게임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안타깝습니다.

○이정선 의원 그런데 문광부는 인터넷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몰입’ 또는 ‘과몰입’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몰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인데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마약 몰입, 알코올 몰입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정선 의원 분명 지금 상황은 인터넷 중독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것은 아마 쓰여지는 인터넷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몰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게임에 관련된,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행성이나 이런 쪽은 그 몰입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능성 게임이나 이런 쪽에도 너무 몰입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정선 의원 치료의 개념이라면 중독이 많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정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광부는 세계 문화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문화적 에너지를 세계화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문화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에 관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문화 바우처 사업 자체가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은 좀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문화 바우처 사업 자체가 약 한 29만 명~한 30만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정선 의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장애인 쪽은 아무래도 좀 더 저조……

○이정선 의원 굉장히 저조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정선 의원 노인 같은 경우도 2.8%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공연 날짜, 시간, 공연장을 다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화 향유의 자유권의 침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현장까지 그 체감온도가 낮지 않았나 싶은데 특히나 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선 의원 지금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또 하나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시설의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아마 장관님께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 같은 경우도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노인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이정선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유형이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또한 노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우니까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복지 욕구 충족, 사업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작년 제작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아주 세심하게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지금 문광부가 전체 정부 예산의 1%밖에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정선 의원** 그 1%에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예산은 2.7%,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은 0.1%입니다. 그나마 작년에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올해부터 저희가 전문요원도 준비를 하고 문화예술 쪽, 특히 장애인 쪽은 올해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결과를 좀 지켜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예,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이정선 의원** 다음은 과학기술부차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해 조사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를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있습니다.

○**이정선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청소년 흡연율은 9%였는데 2008년에는 11%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흡연 청소년 중 90%가……

(영상자료를 보며)

자, 자료를 보십시오.

중학교 졸업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40%에 달하는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20%이던 것이 지금 2009년에 2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흡연 청소년 중 10%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이정선 의원** 대책이 무엇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말씀하신 바

와 같이 청소년기의 흡연 또 음주 같은 행위들은 또 다른 사회적 일탈행위로도 발전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부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예방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독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들어와서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위 프로젝트(Wee Project)’입니다. 아시겠습니까만 국가 차원에서의 학생 안전을 위한 다중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 차원에서 1차 안전망인 ‘위 클래스(Wee Class)’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또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2차 안전망인 ‘위 센터(Wee Center)’, 또 3차 안전망인 시도 교육청 차원의 ‘위 스쿨(Wee School)’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의원** 차관님, 좋은 프로그램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2배, 3배 증가된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다음, 청소년 범죄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5년에 6만 7000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13만 4000명, 또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6.5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범죄 유형을 보면 강도나 강간이 2배로 증가하고 있고 폭행은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연일 보도되고 있는 졸업식 후에 교복을 찢고 속옷까지 찢고 아이를 물에 던지는, 정말 무감각한 상황에서 폭력이라든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과부의 책임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존경하는 이정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성교육의 필요성, 또 청소년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교과부가 올해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저희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창의·인성교육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대책 많이 저희들 주력한 것 아시겠습니까만 실제로 사교육을 줄이고 또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계발하는 것이 정말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원에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창의 체험활동의 시수도 늘리고 교육과정에서 훨씬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체험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봉사활동 또 클럽활동 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교과 중심의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인성이 계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가장 중점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입학사정관 제도가 많이 대학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시제도가 점수 위주로만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을 학생 선발에 반영할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그런 아이들의 인성 됴됨이 같은 것도 입학사정관들이 주요한 선발 요소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제 드디어 인성교육이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해가 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정말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우리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선 의원 이명박 정부는 정말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위주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했다라는 평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강화 교육에서 특히 윤리나 도덕, 생명 존중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뒤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도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확산되려면 아무래도 중앙 차원에서 정부 정책만 발표해 가지고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발표하

는 게 100이라면 현장에 파급되는 것은 한 20~30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정책의 취지를 알고 직접 체감이 되도록 실행에 옮기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도 세세하게 정부가 작성하거나 아니면 시·도 교육청이 작성하게 해서 현장에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업중단학생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이 아까 총리께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말 학생 전체의 10% 수준인 7만 명이 지금 학업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과부는 학업중단학생 현황 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이정선 의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책을 시작하려면 출발점이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학업중단학생들이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NEIS 시스템에서 학업중단학생의 현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의원 전수 실태조사를 말씀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당연히 전수조사가 되어야지 NEIS 시스템에 탑재가 됩니다.

○이정선 의원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래서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은 학업중단 사유를 물어볼 때 2~5개 항목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것만 봐 가지고는 그 아이들의 세세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업중단 사



유를 25개 내외 항목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화된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NEIS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정선 의원** 지금 많은 학업중단학생들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이정선 의원** 대안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이정선 의원** 커리큘럼의 문제라든가 교사의 자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잘하는 대안학교는 인가도 내 주시고 지원도 확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안학교는 그야말로 정규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규격화된 체제 안으로 다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인가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정한, 운영규정을 일단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취지대로 최대한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일단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규정 같은 것을 규제 완화를 해 드려야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엄격한 사립학교 설립 기준 같은 것들은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조금 완화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든가 교지, 교지를 또 임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규제 완화를 해 드렸고요. 또 설립 주체에 있어서도 공사립이 다 가능하도록 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립 인가가 되고 학력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증하는 경우에 위탁교육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안학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모든 대안학교를 전부 실사하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선 의원** 우수한 대안학교는 인증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이정선 의원** 또한 서울시교육청 같은 지역 교육청에서 산업학교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시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학교는 지금 일반계고의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총 6개교를 운영 중이고요, 학생들 선호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2.4 대 1이 고요……

○**이정선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선 의원** 이런 산업학교도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교과부에서는 산업학교뿐만 아니고 일반계고 아이들 중에서 정말 직업을 원하는,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기술계 학원이나 또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해서 직업교육 선택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선 의원** 청소년은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미래의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들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과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0일 국무총리께서 세종시의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에 일정 쿼터제를 주는, 그래서 세계적인 초·중·고를 만들겠다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 계획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그 부분은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 답변드리기……

○**이정선 의원** 교과부 소관이 아니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저희가 1차관, 2차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정선 의원** 그러세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선 의원** 우선 쿼터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 또한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과거의 공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로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우리의 임기와 소명이 다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우리 모두는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숭고한 약속을 국민에게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정치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피해와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충청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지혜롭고 슬기롭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

다. 우리 국회가 결정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성숙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이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딱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혁신도시 추진 등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같은 국정 현안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증가 억제 등과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또 바람직한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대안이 제시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의 질의답변 수준은 넘어서서 좀더 간결하고 핵심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던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감안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은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방청객 수보다 적을 때가 많았고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속개 시간이 예정보다 20분, 30분 늦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도 송구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여가 저조하고 정쟁으로 흐르는 대정부질문제도라면 이제는 본질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국무위원 중에서는 하루 종일 여기에 대기했지만 질문이 한 차례도 없어서 답변대에 한 번도 못 서신 국무위원도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는 국회법에도 지금 현안질문제도 있고 전원위원회제도 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활용하거나 보완·개선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긴박성이나 진정성 면에서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대정부질문 개선 제도를 비롯해서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안을 낸지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대로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반드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맥 빠진 대정부질문제도는 올해로서 끝내도록 합시다. 좀더 민주적인 국회, 좀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의원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좀 모으도록 합시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법안심사에 들어갑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실한 심사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지금 현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위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여야 지도자, 여야 대표 여러분들이 양보의 미덕을 좀 발휘하시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 의원(261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환	김욱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강래	이경제	이계진
이균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57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홍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선동	김성순	김성태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욱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장수	김정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환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선영	박순자
박주선	박준선	박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병수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훈석 신건신 영수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윤상일  
 윤석용 이강래 이계진 이근현  
 이두아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이성현 이영애 이용경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해숙 정갑윤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하균  
 정해결 정희수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윤선 조해진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홍희덕 황우여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63인)

강길부 강명순 고흥길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성식 김소남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원  
 김희철 문희상 박근혜 박보환  
 박상은 박선숙 서병수 송훈석  
 신상진 신영수 안규백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원유철 유일호  
 윤상일 윤상현 이범래 이성남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한성  
 이화수 전재희 전현희 정갑윤  
 정수성 정옥임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주광덕  
 진영 차명진 최병국 한선교  
 허천 홍일표 홍준표

○산회 시 재석 의원(69인)

강명순 강성천 강창일 구상찬

권영세 김금래 김기현 김무성  
 김상희 김영록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재윤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학송  
 김형오 노철래 박보환 박선숙  
 박희태 변재일 배영식 배은희  
 백재현 서종표 송광호 송훈석  
 신건안 경률 안상수 원희목  
 우윤근 유일호 윤상일 이강래  
 이계진 이낙연 이두아 이석현  
 이인기 이정선 이진복 이찬열  
 이춘석 이한성 이해봉 임동규  
 전병현 전재희 전현희 정미경  
 정수성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결 조정태 진수희 차명진  
 최규성 허원제 허천 허태열  
 황진하

○청가 의원(8인)

송영선 오제세 유원일 유재중  
 이애주 임영호 추미애 홍정욱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계동  
 입법차장 안병욱  
 사무차장 임인규  
 의사국장 이종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운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법무부장관 이귀남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환경부장관 이만희  
 노동부장관 임태희  
 여성부장관 백희영  
 특임장관 주호영

○출석 정부위원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제1차관 정창섭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보고사항】

○의안 제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2. 9 권영진 · 신성범 · 이인기 · 권택기 ·

안홍준 · 김성태 · 이성현 · 김정훈 · 조전혁 ·  
황영철 · 정두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2. 9 권영진 · 신성범 · 이인기 · 권택기 ·  
안홍준 · 김성태 · 이성현 · 김정훈 · 조전혁 ·  
황영철 · 정두언 의원 발의)

이상 2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친양자 입양연령 상향을 위한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0. 2. 9 광주 광산구 월곡2동 영천마을주  
공9단지아파트 904동 1302호 양지현 외 31인  
으로부터 이용섭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